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업완료보고서

2024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 사업

2024.11.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제 출 문

서울기록원 귀중

2024년 0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수행한 「2024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수 행 기 관 : 아카이브웍스(주)
사 업 책 임 : 류한조(아카이브웍스(주) 수석연구원)
참여 연구원 : 황진현(아카이브웍스(주) 책임연구원)
김다빈(아카이브웍스(주) 전임연구원)
김선유(아카이브웍스(주) 연구원)
이은정(아카이브웍스(주) 연구원)
김민정(아카이브웍스(주) 연구원)
유재호(아카이브웍스(주) 연구원)

<목 차>

1. 연구개요 ····· 1
1.1.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 필요성 ····· 2
1.3. 연구범위 ····· 2
1.4. 수행 조직 ····· 4
1.5. 산출물 ····· 4

2. 기록물 평가 실행 ····· 6
2.1. 평가라이브러리 보완 및 업데이트 ····· 6
2.2. 2023년 평가 대상 검증 ····· 7
2.3. 2024년 평가 대상 평가 실행 ····· 13

3. 평가체계 평가 기준 및 절차 고도화 ····· 24
3.1.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 개발 ····· 24
3.2. 매뉴얼 및 지침 도출 ····· 30
3.3. 정보기술 기반 평가 업무 확산 방안 검토 ····· 36
3.4. 평가 성과 확산 ····· 46

4. 사전평가 검토서 작성 ····· 48
4.1. 검토서 작성 대상 및 수량 ····· 48
4.2. 작성 결과 ····· 56

5. 기록물 해설서 제작 ····· 57
5.1. 제작 목적 및 방향 ····· 57
5.2. 해설서 제작 과정 ····· 62

부록. 1 사전평가 검토서
2 기록물 해설서
3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지침의 붙임으로 책정기준 포함)
4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

1. 연구개요

1.1. 배경 및 목적

- 서울기록원에서 개발한 사전평가 방식을 처분과정인 평가심의와 연계방안 마련
  - 서울기록원 3단계의 사전평가체계를 최종 평가심의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식개발 및 자료 작성
  - 실제 평가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전평가검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정착시킬 수 있는 경험 확보
  - 사전평가검토서의 작성대상, 작성단위, 작성방식 등에 작성방안 도출
- 사전평가와 사전평가를 토대로 한 전 평가과정의 절차화·체계화 실행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Seoul Digital Archives, 이하 SDA)과 기존 사업 결과물과 연계한 평가과정 표준화
  - 사전평가 과정을 포함한 평가의 전 과정을 절차화하고 체계화하여 매뉴얼 마련
  - 한시기록물 이관이나 사료적 가치에 근거하여 미이관된 기록물 평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기록물평가체계 확립
  - 사료적 가치란 기록의 진본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의 재현, 증거적 활용, 그리고 형태적·심미적·출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가치임
- 평가결과와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들을 엮어 시민 서비스 방안 마련
  - 평가과정에서 도출한 다양한 생산자, 주제, 업무기능에 대해 확보하고 정리한 정보를 가공하여 대시민 서비스 방안 마련
  - 평가과정에서 발굴한 흥미 있는 기록에 대해 평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발간물 간행
- 사전평가 방법의 관할기관 시범 적용
  - 사전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서울기록원이 관할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관받아야 할 장기보존대상 기록물 발굴
  - 자치구의 평가 업무 과정에서 장기보존기록물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 수준 향상 도모
  - 서울기록원의 고유업무인 자치구의 단위과제(단위업무) 등의 보존기간 확정 등에 대한 통일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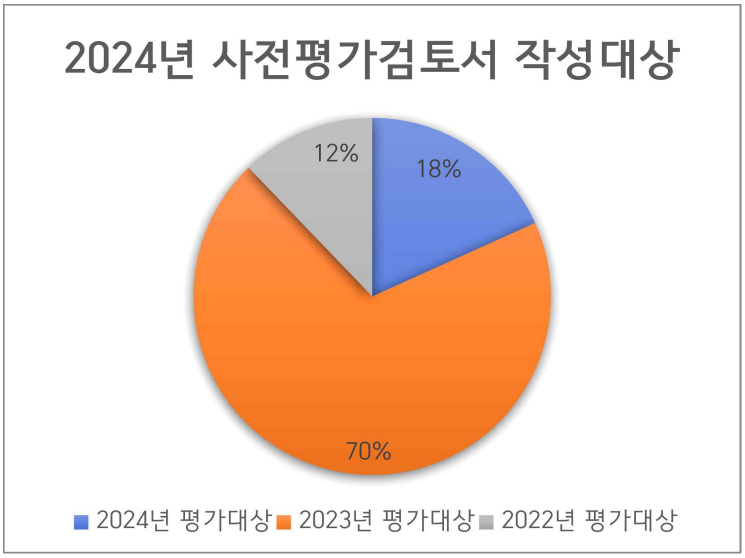
1.2. 연구 필요성

-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의 평가과정 정착
  -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개발한 3단계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체계를 정착하고, 절차화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 방안 확보
  - 기존 마련한 평가체계에 대한 실제 평가심의를 통한 실현가능성 검증
  - 평가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 확보
- 평가체계에 대한 성과 확산
  - 평가과정에서 구축·작성한 주제라이브러리나 사전평가검토서를 재가공하여 효율적인 대시민콘텐츠 제공방안 마련
  - 평가체계의 적용 범위를 관할기관으로 확장하여 서울기록원이 장기보존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1.3. 연구범위

□ 기록물 평가 실행 및 보완

- 서울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사업의 시리즈를 기반으로 도시개발과 교통분야 기록물 선정
- 사전평가검토서 작성 대상 78,256건에 대한 기록물 평가 실행



구분	수량(건)	비율(%)
2022년 평가대상	1,926	12.2%
2023년 평가대상	54,443	69.6%
2024년 신규평가대상	14,287	18.3%

- 2024년 사전평가검토서 작성 대상인 54,444건을 포함하여 2023년 평가대상인 362,674건에 대해 평가체계 업데이트 및 재평가를 통한 검증

□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평가검토서 작성

- 사전평가검토서의 작성방식, 작성서식, 작성단위 설정
- 작성대상 기록물에 대한 사전평가검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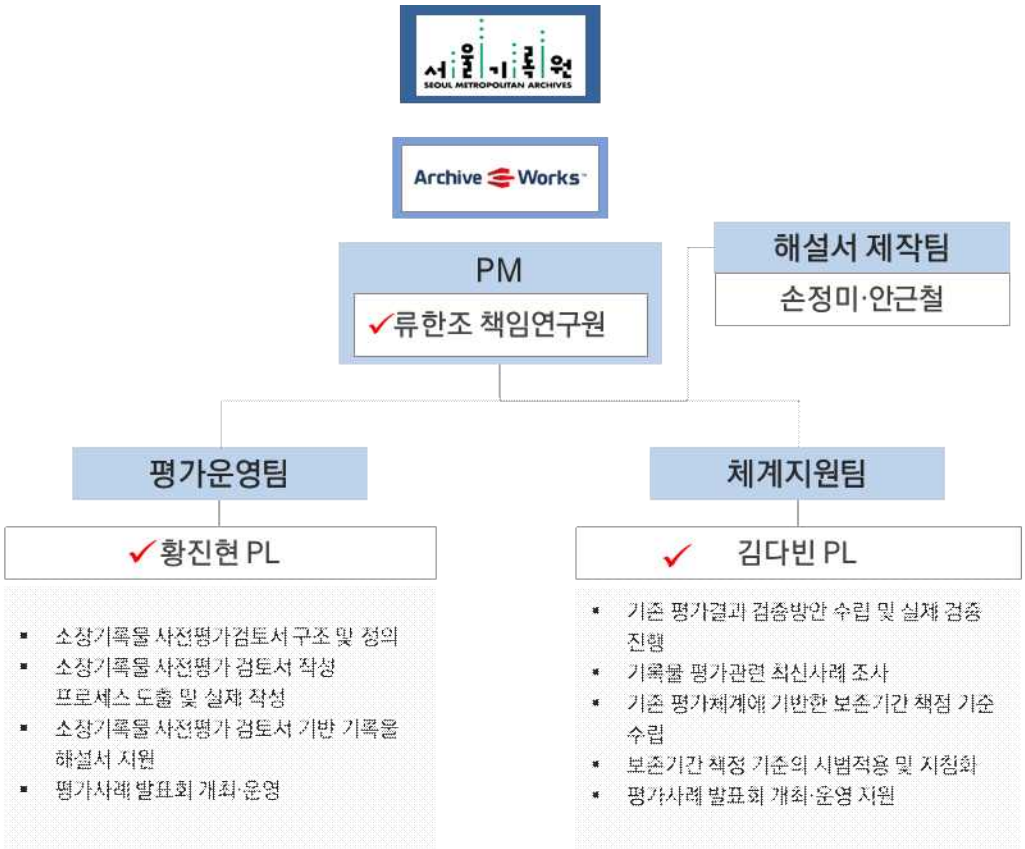
□ 평가결과에 기반한 기록물 해설서 작성

- 사전평가검토서에 기반한 기록물 해설서 작성방식 설정
- 기록물 해설서 집필진 섭외 및 디자인, 발행

□ 성과 고도화 및 정착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자치구 기준 포함) 작성

- 3단계 평가체계와 사전평가검토서 작성 과정, 서울기록원의 평가업무 전반을 매뉴얼화
- 관할기관에 적용가능한 장기보존대상 기록물 유형발굴 및 기준서 작성
- 관할기관에서 적용가능한 평가방안 및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시
- 향후 적용가능한 기술 검토 등

1.4. 수행 조직



1.5. 산출물

□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 결과

- 사전평가검토서 대상 기록물 평가 결과 목록(스프레드시트)
- 2023년 평가 대상 기록물 검증 목록(스프레드시트)

□ 사전평가검토서

- 대상 기록물 전체에 대한 사전평가검토서
- 대상 기록물 전체에 대한 사전평가검토서 대상 목록

□ 기록물해설서

- 기록물 해설서 1식(간행물 형태)

□ 매뉴얼 및 지침

-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

-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

□ 기타

- 평가사례발표회 결과물
- 평가관련 최신기술 조사 결과

2. 기록물 평가 실행

2.1. 평가라이브러리 보완 및 업데이트

□ 법령 정보 라이브러리 보완 및 업데이트

- 개정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 후 개별법 규정 및 특정 법정서식 등 법령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수행
  - 이를 반영하여 법규 기반 평가 키워드 판별 기준을 고도화하고 재검토에 반영
  - 또한, 기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체계에 포함가능한 결재권자의 이형동의어를 추가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여 평가의 정확성 제고

□ 기록관리기준표 및 공약·시책 업데이트

-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2024) 반영
  - 업무기능 기반 평가는 기본형을 토대로 서울시의 '현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평가임에 따라 2024년 기록관리기준표로 평가 도구 업데이트 수행
- 중요 공약 및 시책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당선인 공약집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 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수행

□ 주제 라이브러리 보완 및 업데이트

- 주제 라이브러리, 키워드 작성 규칙 업데이트 수행 및 반영
  - 키워드 작성 규칙 업데이트를 통해 기록 건 제목-주제 키워드 간 매핑 정확도 향상
  - 다양한 이형동의어를 추출 및 반영하여 키워드 선별의 정합성을 높이고 누락 여부 재검토 수행
  - '24년도 재평가 기준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보완

2.2. 2023년 평가 대상 검증

□ 기평가 결과에 재검토 및 보완

- 2023년 완성된 평가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법령과 표준,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 주제라이브러리 및 키워드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정합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및 보완 수행
- ‘23년 평가대상 기록에 대하여 보완 및 업데이트 완료한 평가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를 추가로 실시
- 기록 건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21년~ ‘22년 평가 대상 기록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록철 기준으로 추가평가 수행
-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재검토 및 보완
  - 기록 건을 기준으로 진행한 기존 평가 결과를 기록철 기준으로 샘플링 후 검증 결과 모두 장기보존 책정되었음을 확인
    - 재검토 및 보완 예) 법규 기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에 따라 ‘도로공사와 관련한 준공도면’이 포함된 준공도 철은 해당 기록물이 법적으로 영구보존 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
  - 장기보존으로 책정된 결재권자 직급에 대한 기록 건 및 기록철을 샘플링 후 검증하여 기존의 결과값이 적절한지 재검토
  - 업데이트 완료한 법령 정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추가 재검토 수행
-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재검토 및 보완
  - 현재의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2024)로 업데이트 후 평가단위와 연결하여 오분류 확인 및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사항 재검토 수행
  - 공약 및 시책 구축의 경우 중요 결재권자 직급인 구청장 등의 공약집(당선인 공약집)에 대한 추가 검토 후 공약 및 시책 원천 업데이트를 토대로 재검토 수행
  - 또한, 공약 및 시책 반영 결과를 샘플링하여 기록 철·건 제목, 철·건 빅데이터 명칭과의 매핑을 검증한 결과에 대한 적합성 확인
- 주제 기반 평가 결과 재검토 및 보완
  - 업데이트 완료한 주제 라이브러리 및 키워드 규칙을 활용하여 추가 재검토 수행

- 재검토 및 보완 예) 문화재인 경복궁, 서울독립문 관련 기록물철이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
- 키워드 '어린이 회관'과 관련하여 중요사건인 '10월 유신 시기 도시 건축의 변화' 관련 기록물 철이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
- 이형동의어를 반영한 키워드 규칙 업데이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기록물'에 심의안, 상정안 관련 기록물을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정

2.2.2. 재검토 및 보완 결과

□ 기평가 결과

▪ 전체 평가 대상 기록물 362,674건 중 장기보존으로 결정된 건은 198,558건으로 약 55%에 해당하며, 실물평가 권고 기록은 81,702건으로 약 23%, 폐기 권고 기록은 82,414건으로 약 23%에 해당

<표 1> 2023년 평가 대상 기록물 기평가 결과

평가 결과	건 수	비율
장기보존	198,558	54.8%
실물평가 권고	81,702	22.5%
폐기 권고	82,414	22.7%
합계	362,674	100%

▪ 법규 기반 기평가 결과

- 평가 대상 기록물 전체 362,674건을 대상으로 법규 기반 평가 수행
-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14,083건(3.9%),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 대상은 348,591건(96.1%)

<표 2> 법규 기반 기평가 결과

평가결과	건 수	비율
장기보존	14,083	3.9%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348,591	96.1%
합계	**362,674**	**100%**

▪ 업무기능 기반 기평가 결과

-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에 해당하는 348,591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수행
-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182,601건(52.3%),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81,064건(23.2%), 10년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72,758건(20.9%), 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12,168건(3.5%)

<표 3> 업무기능 기반 기평가 결과

평가결과		건 수		비율	
장기보존		182,601		52.3%	
실물평가권고		81,064		23.2%	
3단계 평가 적용	10년이하 기록으로 식별	84,926	72,758	24.3%	20.9%
	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		12,168		3.5%
합계		348,951		100%	

▪ 주제 기반 기평가 결과

-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10년 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처리 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84,926건을 대상으로 주제 기반 평가 수행
-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실물평가 권고’에 해당하는 81,064건은 주제 기반 평가를 적용하되, 실물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최종적으로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를 반영
- 주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1,874건(2.2%),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638건(0.8%), 폐기 권고 대상은 82,414건(97%)

<표 4> 주제 기반 기평가 결과

평가 결과	건 수	비율
장기보존	1,874	2.2%
실물평가 권고	638	0.8%
폐기 권고	82,414	97%
합계	**84,926**	**100%**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 전체 평가 대상 기록물 362,674건 중 재검토 및 보완한 평가 적용 결과 장기보존으로 결정된 건은 198,499건으로 54.7%에 해당하며, 실물평가 권고 기록은 84,484건으로 23.3%, 폐기 권고 기록은 79,691건으로 22%에 해당
- 기평가 결과 대비 장기보존 결정 기록은 59건 감소(0.02%↓) 하였으며, 실물평가 권고 기록은 2,782건 증가(3.4%↑)하였고 폐기 권고 기록은 2,723건 감소(3.3%↓)

<표 5> 2023년 평가 대상 기록물 재검토 및 보완 결과

평가 결과	건 수(기평가 대비 증감율)	비율
장기보존	198,499(0.02%↓)	54.7%
실물평가 권고	84,484(3.4%↑)	23.3%
폐기 권고	79,691(3.3%↓)	22%
합계	362,674	100%

- 법규 기반 평가 재검토 및 보완 결과
  - 평가 대상 기록물 전체 362,674건을 대상으로 재검토 및 보완한 법규 기반 평가 수행

<표 6> 법규 기반 평가 재검토 및 보완 결과

평가결과	건 수(기평가 대비 증감율)	비율
장기보존	12,992(7.7%↓)	3.6%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349,682(0.3%↑)	96.4%
합계	362,674	100%

- 재검토 및 보완한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12,992건(3.6%),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 대상은 349,682건(96.4%)로 확인
- 재검토 및 보완한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기존 14,083건에서 12,992건으로 1,091건 감소(7.7%↓)
- 재검토 및 보완한 결과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대상은 기존 348,591건에서 349,682건으로 1,091건 증가(0.3%↑)
- 재검토 및 보완한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 기준 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7> 재검토 및 보완한 법규 기반 평가 장기보존 대상 기준 별 비율

평가 결과	건수	비율
결재권자 직급만 해당	5,304	40.8%
법정서식만 해당	7,723	59.4%
둘 다 해당	35	0.3%
1단계 장기보존 대상	12,992	100%

▪ 업무기능 기반 평가 재검토 및 보완 결과

-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에 해당하는 349,682건을 대상으로 재검토 및 보완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수행
- 재검토 및 보완한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183,626건(52.5%),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81,148건(23.2%), 10년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72,750건(20.8%), 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12,158(3.5%)로 확인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기존 182,601건에서 183,626건으로 1,025건 증가(0.5%↑)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기존 81,064건에서 81,148건으로 84건 증가(0.1%↑)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10년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기존 72,758건에서 72,750건으로 8건 감소(0.01%↓)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12,168건에서 12,158건으로 10건 감소(0.08%↓)

<표 8> 업무기능 기반 평가 재검토 및 보완 결과

<table>
<tr><th colspan="2">평가결과</th><th colspan="2">건 수(기평가 대비 증감율)</th><th colspan="2">비율</th></tr>
<tr><td colspan="2">장기보존</td><td colspan="2">183,626(0.5%↑)</td><td colspan="2">52.5%</td></tr>
<tr><td colspan="2">실물평가권고</td><td colspan="2">81,148(0.1%↑)</td><td colspan="2">23.2%</td></tr>
<tr><td rowspan="2">3단계 평가 적용</td><td>10년이하 기록으로 식별</td><td rowspan="2">84,908</td><td>72,750 (0.01%↓)</td><td rowspan="2">24.3%</td><td>20.8%</td></tr>
<tr><td>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td><td>12,158 (0.08%↓)</td><td>3.5%</td></tr>
<tr><td colspan="2">합계</td><td colspan="2">349,682</td><td colspan="2">100%</td></tr>
</table>

■ 주제 기반 평가 재검토 및 보완 결과

-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10년 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처리 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84,908건을 대상으로 재검토 및 보완한 주제 기반 평가 수행
-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실물평가 권고’에 해당하는 81,148건은 3단계 주제 기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실물평가 권고 값 도출
  -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이미 실물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활용도를 고려하여 3단계 주제 기반 평가 제외
- 재검토 및 보완한 주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1,881건(2.2%),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3,336건(3.9%), 폐기 권고 대상은 79,691(93.9%)으로 확인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기존 1,874건에서 1,881건으로 7건 증가(0.3↑)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기존 638건에서 3,336건으로 2,698건 증가(422%↑)
  - 중복 평가를 거쳤던 기존의 절차를 단순화한 평가방식 변경으로 인해 ‘23년도와 ‘24년도

의 수치 비교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는 평가과정에서의 실질적 실익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며, 단순히 수치상 상승만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아님

● 재검토 및 보완 결과 폐기 권고 대상은 기존 82,414건에서 79,691건으로 2,723건 감소(3.3↓)

<표 9> 주제 기반 평가 재검토 및 보완 결과

평가 결과	건 수(기평가 대비 증감율)	비율
장기보존	1,881(0.3↑)	2.2%
실물평가 권고	3,336(422%↑)	3.9%
폐기 권고	79,691(3.3↓)	93.9%
합계	**84,908**	**100%**

2.3. 2024년 평가 대상 평가 실행

■ 2023년 평가 대상 검증을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토대로 도시개발 분야, 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2021년~2023년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대상 기록과 2024년 신규 선정 기록을 선별하여 추가평가 실행

<표 10> 2024년 평가체계 보완사항

평가 체계	보완사항
법규 기반 평가	업데이트 완료한 법령 정보 라이브러리 적용
업무기능 기반 평가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2024)와 연계한 평가단위 적용
	중요 결재권자 직급인 구청장 등의 공약 및 시책 적용
주제 기반 평가	업데이트 완료한 주제 라이브러리와 키워드 작성 규칙 적용

■ 2021~2023년 평가 대상 기록 63,969건(82%), 2024년 신규 평가 대상 기록 14,287건(18%)으로 총 78,256건 평가 수행

2.3.1. 법규 기반 평가(1단계) 결과

□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종합

- 평가 대상 기록 전체 78,256건을 대상으로 법규 기반 평가 수행
- 기존 법령 및 서식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평가 반영

<표 11>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건수	비율
장기보존	6,172	7.9%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	72,084	92.1%
합계	78,256	100%

- 법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6,172건(7.9%),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 대상은 72,084건(92.1%)로 확인

- 법규 기반 평가에서는 결재권자 직급 또는 법정서식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장기보존 대상이며, 장기보존 대상 기록 건 중 두 가지 평가 기준에 모두 해당하거나 한 가지에만 해당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2> 법규 기반 평가 장기보존 대상 기준 별 비율

평가 결과	건수	비율
결재권자 직급만 해당	728	11.8%
법정서식만 해당	5,435	88.1%
둘 다 해당	9	0.1%
1단계 장기보존 대상	6,172	100%

- 1단계 장기보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결재권자 직급에만 해당하는 기록 건은 728건(11.8%), 법정서식에만 해당하는 기록 건은 5,435건(88.1%)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기록 건은 9건(0.1%)인 것으로 확인됨

□ 결재권자 직급 반영 결과

- 평가 대상 기록물 전체 78,256건을 대상으로 결재권자 직급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3> 결재권자 직급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보존	시장	737	359	0.9%	48.7%
	부시장		327		44.4%
	구청장		51		6.9%
가치재검토		77,519		99.1%	
합계		78,256		100%	

- 결재권자 직급 반영 결과 시장, 부시장, 구청장으로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기록 건은 737건(0.9%)이며, 시장은 359건(48.7%), 부시장은 327건(44.4%), 구청장은 51건(6.9%)임

□ 법정서식 평가 반영 결과

- 평가 대상 기록물 전체 78,256건을 대상으로 법정서식 평가를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4> 법정서식 평가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보존	등기	5,444	3,497	7.0%	64.2%
	등록부/도면		51		0.9%
	사건재판		186		3.4%
	지적/토지/건물		1,710		31.4%
가치재검토		72,812		93.0%	
합계		78,256		100%	

- 법정서식 평가 결과 보존 대상은 5,444건(7.0%)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키워드별로는 등기 3,497건(64.2%), 등록부/도면 51건(0.9%), 사건재판 186건(3.4%), 지적/토지/건물 1,710건(31.4%)로 확인
  - 평가체계 설계 시 평가 및 평가 검토의 용이함을 위해 임의로 9개 키워드(지적/토지/건물, 등록부/도면, 등기, 사건재판, 신원증명, 상훈/선물, 기관법인관리규칙, 과학기술자료, 기타증명)로 법정서식을 구분하였으나, 평가 대상 기록물이 도시개발 분야, 교통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평가 결과 4개 키워드만 적용되었음

2.3.2. 업무기능 기반 평가(2단계) 결과

□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종합

- 1단계 법규 기반 평가 단계에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에 해당하는 72,084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수행
-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를 업데이트하여 평가 반영

<표 15>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건수		비율	
장기보존		48,658		67.5%	
실물평가 권고		16,099		22.3%	
3단계 평가 적용	10년 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7,327	5,256	10.2%	71.7%
	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2,071		28.3%
합계		72,084		100%	

-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48,658건(67.5%),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16,099건(22.3%),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7,327건(10.2%)에 해당
- 3단계 평가 적용 대상 중 10년 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5,256건(71.7%), 처리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적용 대상은 20,168건(3.5%)으로 각각 확인

□ 공약 및 시책 반영 결과

- 1단계 법규 기반 평가 단계에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에 해당하는 72,084건을 대상으로 공약 및 시책 적용
- 기록 건 대상 공약 및 시책 반영 결과
  -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기록 건에 공약 및 시책이 적용된 비율은 17.9%에 해당

<표 16> 기록 건 대상 공약 및 시책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해당	14,077	19.5%
해당없음	48,666	67.5%
처리불가	9,341	13.0%
합계	72,084	100%

- 기록 철 대상 공약 및 시책 반영 결과
  -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기록 철을 기준으로 공약 및 시책을 반영한 결과 21.7% 건에 공약 및 시책이 적용됨

<표 17> 기록 철 대상 공약 및 시책 반영 결과

평가결과	건수	비율
해당	19,088	26.5%
해당없음	44,337	61.5%
처리불가	8,659	12.0%
합계	72,084	100%

- 평가 대상이 관선 시장 시기 기록이 다수이므로 공약 및 시책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적용에 다소 어려움 존재
- 민선 시장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및 시책 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민선 시장 시기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에는 보다 많은 기록 건·철에 공약 및 시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기록 건 대상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 1단계 법규 기반 평가 단계에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에 해당하는 72,084건을 대상으로 기록 건 대상 업무기능 평가 수행

<표 18> 기록 건 대상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30년 이상	48,600	67.4%
10년 이하	14,143	19.6%
처리불가	9,341	13.0%
합계	72,084	100%

- 기록 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은 67.4%,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은 19.6%에 해당

□ 기록 철 대상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 1단계 법규 기반 평가 단계에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적용'에 해당하는 72,084건을 대상으로 기록 철 대상 업무기능 평가 수행

<표 19> 기록 철 대상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30년 이상	55,738	77.3%
10년 이하	7,687	10.7%
처리불가	8,659	12.0%
합계	72,084	100%

- 기록 철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은 77.3%,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은 10.7%에 해당

□ 기록 건·철의 업무기능 기반 평가 결과 비교

▪ 기록 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은 48,600건으로 확인

-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 건에 대한 기록 철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확인된 기록은 42,329건으로 87.0%에 해당
-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 건에 대한 기록 철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확인된 기록은 1,678건으로 3.5%에 해당

<표 20> 기록 건 평가 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에 대한 기록 철 평가 결과

기록 건 업무기능 평가 결과	기록 철 업무기능 평가 결과	건수	비율
30년 이상	30년 이상	42,329	87.0%
	10년 이하	1,678	3.5%
	처리불가	4,593	9.5%
합계		48,600	100%

- 기록 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은 14,143건으로 확인
  - 기록 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수행 시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 중 기록 철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마찬가지로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확인된 기록은 51,484건으로 55.3%에 해당
  - 기록 건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 수행 시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 중 기록 철을 대상으로 업무기능 기반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확인된 기록은 25,821건으로 27.7%에 해당

<표 21> 기록 건 평가 시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에 대한 기록 철 평가 결과

기록 건 업무기능 평가 결과	기록 철 업무기능 평가 결과	건수	비율
10년 이하	30년 이상	6,652	47.0%
	10년 이하	5,496	38.9%
	처리불가	1,995	14.1%
합계		14,143	100%

2.3.3. 주제 기반 평가(3단계) 결과

□ 주제 기반 평가 결과 종합

- 2단계 업무기능 기반 평가 단계에서 ‘10년 이하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 ‘처리 불가 기록으로 식별되어 3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7,327건을 대상으로 주제 기반 평가 수행
- 주제라이브러리와 키워드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평가 반영

<표 22> 주제 기반 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건수	비율
장기보존	392	5.4%
실물평가 권고	1,717	23.4%
폐기 권고	5,218	71.2%
합계	7,327	100%

- 주제 기반 평가 결과 장기보존 대상은 392건(5.4%), 실물평가 권고 대상은 1,717건(23.4%), 폐기 권고 대상은 5,218건(71.2%)으로 각각 확인

□ 중요 사건 평가 요소 반영 결과 종합

▪ 기록 건 대상 중요 사건 평가 요소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 중요 사건 평가 요소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 수	비율
해당	380	5.2%
해당없음	6,947	94.8%
합계	7,327	100%

- 주제 기반 평가 단계에서 기록 건에 중요 사건 평가 요소를 적용한 결과, 5.2%가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으로 확인

□ 중요 장소 평가 요소 반영 결과 종합

▪ 기록 건 대상 중요 장소 평가 요소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4> 중요 장소 평가 요소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해당	33	0.5%
해당없음	7,294	99.5%
합계	7,327	100%

- 주제 기반 평가 단계에서 기록 건에 중요 장소 평가 요소를 적용한 결과,

0.5%가 중요 장소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으로 확인

□ 문화유산 평가 요소 반영 결과 종합

▪ 기록 건 대상 문화유산 평가 요소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5> 문화재 평가 요소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해당	16	0.2%
해당없음	7,311	99.8%
합계	7,327	100%

- 주제 기반 평가 단계에서 기록 건에 문화유산 평가 요소를 적용한 결과, 0.2%가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으로 확인

□ 수집 정책 평가 요소 반영 결과 종합

▪ 기록 건 대상 수집 정책 평가 요소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6> 수집 정책 평가 요소 반영 결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해당	1,930	26.3%
해당없음	5,397	73.7%
합계	7,327	100%

- 주제 기반 평가 단계에서 기록 건에 수집 정책 평가 요소를 적용한 결과, 26.3%가 수집 정책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으로 확인
- 도시개발 분야,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수집 정책 평가 요소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여러 분야의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2.3.4. 종합 평가 결과

▪ 전체 평가 대상 기록물 78,256건 중 장기보존으로 결정된 건은 55,222건으로 70.5%에 해당하며, 실물평가 권고 기록은 17,816건으로 22.8%, 폐기 권고 기록은 5,218건으로 6.7%에 해당

<표 27> 전체 평가 대상 기록물 평가 결과에 따른 기록 건 수량 및 비율

평가 결과	건수	비율
장기보존	55,222	70.5%
실물평가 권고	17,816	22.8%
폐기 권고	5,218	6.7%
합계	78,256	100%

- 또한 전체 평가 대상 기록물 6,563철 중 장기보존으로 결정된 철은 5,390철로 82.1%에 해당하며, 실물평가 권고 기록은 1,149철로 17.5%, 폐기 권고 기록은 24철로 0.4%에 해당

<표 28> 전체 평가 대상 기록물 평가 결과에 따른 기록 철 수량 및 비율

평가 결과	철수	비율
장기보존	5,390	82.1%
실물평가 권고	1,149	17.5%
폐기 권고	24	0.4%
합계	6,563	100%

- 기록 건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장기보존' 기록이 68.1%, '실물평가 권고' 기록이 19.0%, '폐기 권고' 기록이 6.4%가량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분야는 약 0%~5% 사이에서 고르게 나타남

<표 29> 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른 기록 건 수량 및 비율

분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도시개발	장기보존	53,259	68.1%
	실물평가 권고	14,899	19.0%
	폐기 권고	5,014	6.4%
교통	장기보존	1,963	2.5%
	실물평가 권고	2,917	3.7%
	폐기 권고	204	0.3%

분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합계		78,256	100%

▪ 기록 철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장기보존’ 기록이 59.7%, ‘실물평가 권고’ 기록이 5.7%, ‘폐기 권고’ 기록이 0.3%가량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분야는 ‘장기보존’ 기록이 22.5%, ‘실물평가 권고’ 기록이 11.7%, ‘폐기 권고’ 기록이 0.1%가량으로 나타남

<표 30> 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른 기록 철 수량 및 비율

분야	평가 결과	건수	비율
도시개발	장기보존	3,920	59.7%
	실물평가 권고	374	5.7%
	폐기 권고	21	0.3%
교통	장기보존	1,476	22.5%
	실물평가 권고	769	11.7%
	폐기 권고	3	0.1%
합계		6,563	100%

3. 평가체계 평가 기준 및 절차 고도화

3.1.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 개발

□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 도입 배경

- 자치구 내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사전 식별
  -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장기보존기록물 현황을 서울기록원에서 사전에 식별하여 서울시 전체의 주요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
  - 서울기록원의 3단계 평가체계에 근거한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을 자치구에 적용하여 성과 확산
  - 기존 기록관리기준표상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정의
- 자치구 내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유형 발굴 및 업무적용
  - 법적 의무 보존기간이 존재하거나 공통업무기준표 등 다수의 근거를 쉽게 기록관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유형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자치구 내에서 평가심의회 운영,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및 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필요
- 중요 기록에 대해 자치구 내 보존기간 책정 통일성 부여
  -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장기보존 대상기록에 통일성 있는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서울시 전체의 중요 기록물이 누락 없이 보존될 수 있는 근거 필요
  - 자치구의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이나 평가심의회 운영과 같은 자율적 업무에 대해 근거를 제공하면서도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장기보존에 필요한 다수의 책정 근거에 대한 문서화
  - 다양한 법적 근거나 준칙 외에도 자치구에서 장기보존을 필요로 하는 중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을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자치구에 공유
  - 지속적으로 장기보존 대상 기록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문서화를 통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신설·삭제·변경이 가능한 도구 형태로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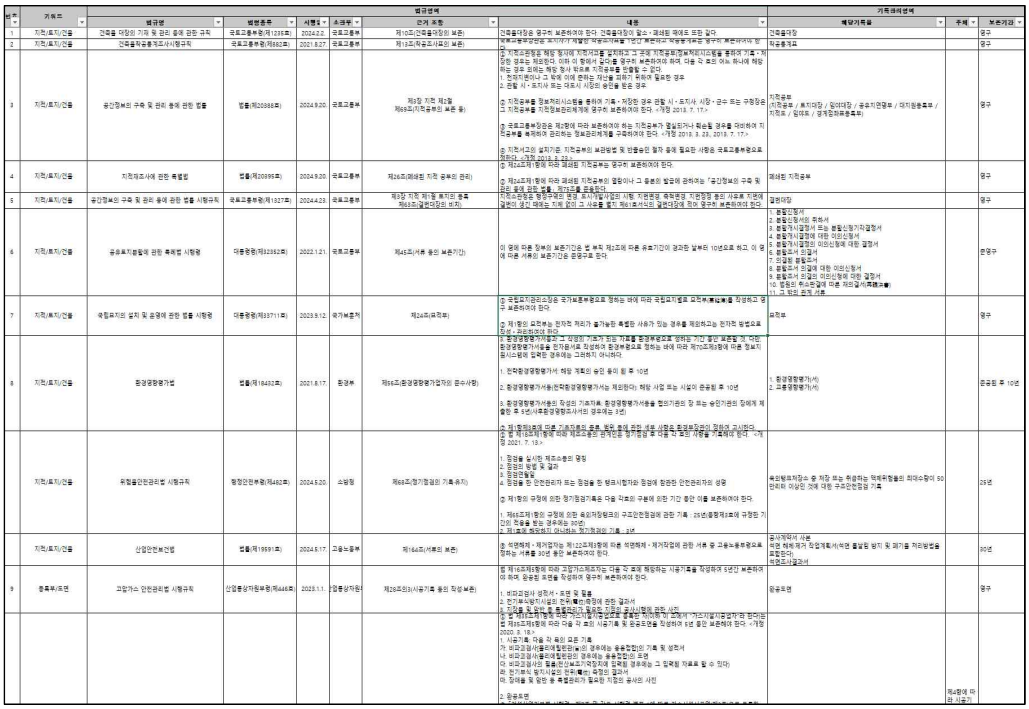
□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 도출 과정

- 템플릿 작성 및 관련 근거 탐색
  -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기록원과 자치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도출하고 템플릿화
  - 자치구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준칙 등을 탐색하여 해당 내용 정리
- 일부 자치구 인터뷰 및 사례 확인
  - 시범자치구를 대상으로 장기간 업무 참조의 필요성 등 법령이나 준칙 외 장기보존 소요 요소 확인
  - 시범자치구를 대상으로 기록물 제목이나 생산형태 등에 대한 사례 확인
  - 자치구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특정 기록물의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서의 항목 및 내용 조정
- 주요 내용 문서화 및 확정
  -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템플릿에 맞게 책정기준서 형태로 도출
  - 설명회 등의 절차를 토대로 확정 진행
  -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
- 설명회와 의견조회 등 검증 진행
  - 설명회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전체 자치구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누락이나 오류에 대한 검증을 진행

□ 개발 방향

- 3단계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대상, 작성단위를 도출
  - 법규 기반 평가, 업무기능 기반 평가, 주제 기반 평가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물에 대해 유형화 수행
  - 법규 기반 평가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물의 경우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보존 대상 법정 서식의 범위를 작성 대상으로 함
  - 법정서식명이 그대로 표현되는 기록과 법정서식이 포함될 수 있는 기록물이 해당
  - 자치구 단위에서 적용되는 현행법을 검토하여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준용해야 하는 법규에 기반한 보존기간 관련 근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구의 권한이나 위임범위 등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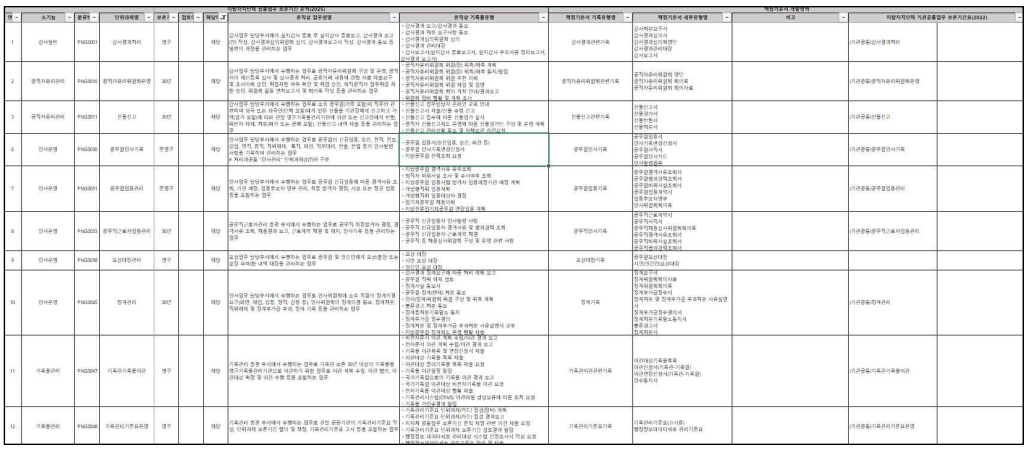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 단위에서 생산 및 보존되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유형 확정



<그림 2> 법규 기반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선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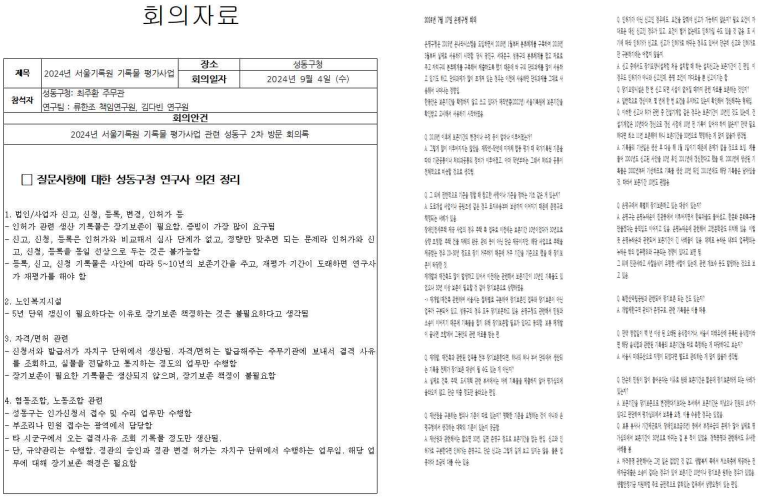
● 업무기능 기반 평가 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5)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2022)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책정된 단위과제와 그에 포함되는 기록물의 유형을 작성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지방자치단체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보존 필요성을 준용
- 준칙 등의 변동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정기준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그림 3> 준칙 및 보존기간 표를 활용한 업무기능 기반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선별 과정

- 또한, 시범자치구인 서울시 성동구와 은평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각 자치구에서 장기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자치구에 교차검증을 수행하여 대상 기록물 유형 도출
- 인터뷰 수행 결과 도출된 업무기능 기반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유형의 예시로는 법인 및 사업자의 인·허가 관련 기록, 건축법 및 주택법과 관련하여 사용승인, 사용검사, 공동주택의 신축·대수선·철거 시 행위허가, 공공시설 건립 관련 기록 등이 해당


회의자료

제목	2024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사업	장소	성동구청
		회의일자	2024년 9월 4일 (수)
참석자	성동구청: 최주환 주무관 연구팀 : 류한조 책임연구원, 김다빈 연구원		

회의안건

2024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사업 관련 성동구 2차 방문 회의록

□ 질문사항에 대한 성동구청 연구사 의견 정리

1. 법인/사업자 신고, 신청, 등록, 변경, 인허가 등
- 인허가 관련 생산 기록물은 장기보존이 필요함. 증빙이 가장 많이 요구됨
- 신고, 신청, 등록은 인허가와 비교해서 심사 단계가 없고, 경량한 업무면 되는 문제라 인허가와 신고, 신청, 등록을 동일 선상으로 두는 것은 불가능함
- 등록, 신고, 신청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5~10년의 보존기간을 주고, 재평가 기간이 도래하면 연구사가 재평가를 해야 함

2. 노인복지시설
- 5년 단위 생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보존 책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3. 자격/면허 관련
- 신청서와 발급서가 자치구 단위에서 생산됨. 자격/면허는 발급해주는 주무기관에 보내서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실물을 전달하는 절도의 업무만 수행함
- 장기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은 생산되지 않으며, 장기보존 책정이 불필요함

4. 협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 성동구는 인가신청서 접수 및 수리 업무만 수행함
- 부조리나 민원 접수는 광역에서 담당함
- 타 시군구에서 오는 결격사유 조회 기록물 정도만 생산됨.
- 단, 규약관리는 수행함. 정관이 승인과 관련 변경 허가는 자치구 단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임. 해당 업무에 대해 장기보존 책정은 필요함

<그림 4> 자치구 대상 인터뷰 결과 업무기능 기반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 선별 과정

- 주제 기반 평가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물의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생산될 수 있는 구 등록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관련 기록물이 해당

■ 3단계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 방식을 도출

- 법규 기반 평가, 업무기능 기반 평가, 주제 기반 평가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각 기록물 유형에 대해 해당되는 평가의 단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작성 대상과 작성 단위를 기록유형명으로 정의하고, 하위에 포함되는 기록물을 세부유형으로 표기
- 기록물의 범위 및 성격을 자세히 기입하고 기록물 세부유형과 형태, 관련 서식을 표기하여 작성 대상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자치구에서 해당 기록을 실제로 편철 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의 사용 현황을 제시하여 생산단계에서의 단위과제 분포 예시를 제공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보존기간을 상단에 제시하여 관련 기록물에 대해 부여해야 하는 보존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록유형 생산부서를 상단에 제시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 주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는 부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자치구에서 생산 및 접수되는 문서 제목을 예시로 제시하여 해당 기록물이 생산되는 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의 생산 근거,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관련 근거, 기록물의 보존 방법과 관련된 근거, 기록물의 보존장소와 관련된 근거, 기록물의 처분 방법과 관련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법규 기반 평가, 업무기능 기반 평가, 주제 기반 평가의 결과와 자치구 대상 인터뷰 수행 결과 파악된 장기적으로 업무에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증빙 관련 소요, 기록물의 생산 근거, 보존기간 관련 근거, 보존방법 관련 근거, 보존장소 관련 근거, 처분 근거를 종합하여 해당 기록물의 장기보존 필요성을 종합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개발 결과

▪ 작성 방식을 종합하여 템플릿 형태로 제시

<table>
<tr><td>① 기록유형번호</td><td></td><td>② 기록유형명</td><td colspan="5"></td></tr>
<tr><td>③ 기록유형
생산부서</td><td></td><td>④ 보존기간</td><td colspan="5"></td></tr>
<tr><td>⑤ 기록물
범위 및 성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기록물
세부유형
및 형태</td><td>⑥ 기록물
형태</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⑦ 기록물
세부유형
및 서식</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rowspan="3">⑧ 자치구
단위과제
사용 현황</td><td>순번</td><td>중기능</td><td>소기능</td><td>단위
과제명</td><td>업무설명</td><td>보존
기간</td><td>보존기간 책정사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⑨ 서울형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결과</td><td colspan="6">☐ 법규 기반 평가
☐ 업무기능 기반 평가
☐ 주제 기반 평가
} 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으로 선별되었음</td></tr>
<tr><td>⑩ 생산기록물
예시</td><td colspan="6"></td></tr>
<tr><td>⑪ 기록물
생산 근거</td><td colspan="6"></td></tr>
<tr><td>⑫ 기록물
보존기간 등
근거</td><td colspan="6"></td></tr>
<tr><td>⑬ 기록물
보존장소 근거</td><td colspan="6"></td></tr>
<tr><td>⑭ 기록물
처분 근거</td><td colspan="6"></td></tr>
</table>

⑮ <서식>

<그림 5> 서울특별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3.2. 매뉴얼 및 지침 도출

3.2.1. 서울특별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 수립 및 작성

□ 지침 도출 목적

- 서울특별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연계하여 자치구 등 서울기록원 관할기관이 기록물에 대한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의 신설 등 검토, 보존기간 정비, 처분, 평가 업무 등에 평가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관할기관에서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을 일관성 있게 식별하고 관리하여 서울기록원의 중요기록물이 누락 없이 이관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함
- 관할기관의 평가 업무 과정에서 장기보존 대상 기록물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 지원
- 서울기록원의 고유업무인 관할기관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확정 시,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통일성 확보

□ 지침의 적용 범위

- 관할기관 중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을 대상으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연계하여 관할기관에서 수행되는 주요 평가 업무에 적용되는 사항
- 관할기관 기록관이 관리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및 준영구·영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에 적용
- 관할기관 기록관은 지침이 제시하는 사항과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을 기록물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

□ 지침 구성

-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이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상황과 관할기관(기록관)을 중심으로 사용 방안 제시
  - 서울시 자치구 기록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개요
  -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대상과 근거

-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내용
-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외 기록유형
-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 결과 반영

● 관할기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실행

-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개요
-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대상과 기준
-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내용
- 정비 결과 반영

● 서울시 자치구 기록물 처분지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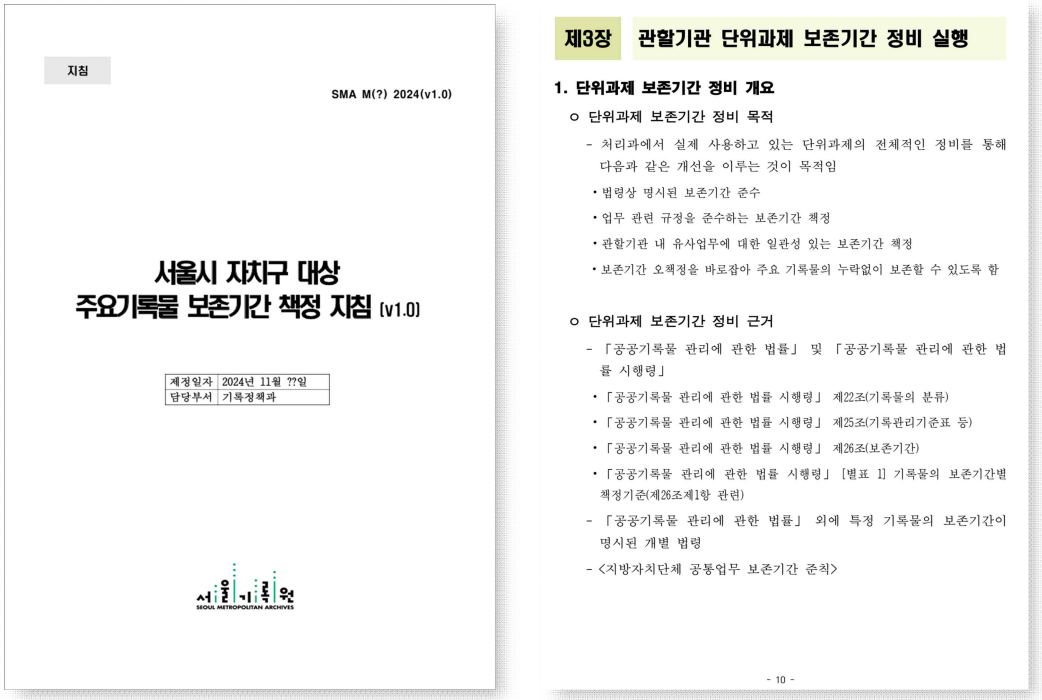
- 처분지침 적용 개요
- 적용 대상과 근거
- 적용 내용
- 적용 결과 반영

● 서울시 자치구 기록물 평가심의 실행 시 기준 적용

- 실행 개요
- 실행 대상과 근거
- 평가심의업무 시 기준활용 내용
- 평가심의결과 반영 시 실행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책정기준 유지관리 방안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현행화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신설·변경·삭제 절차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구성


지침

SMA M(?) 2024(v1.0)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 (v1.0)

제정일자	2024년 11월 ??일
담당부서	기록정책과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제3장 관할기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실행

1.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개요

○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목적

- 처리과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임

• 법령상 명시된 보존기간 준수
• 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보존기간 책정
• 관할기관 내 유사업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존기간 책정
• 보존기간 오책정을 바로잡아 주요 기록물의 누락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록물의 분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특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명시된 개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10 -

<그림 6>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

3.2.2.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 수립 및 작성

□ 평가 업무 매뉴얼 개발 방향

- 기존 평가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고도화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기록원에 적용가능한 평가 업무 매뉴얼 개발
- 평가 업무 준비, 관할기관 대상 평가 업무 실행, 서울기록원 내 평가 업무 실행 등 평가 업무 주요 절차에 대한 매뉴얼 개발
- 서울기록원의 정책비전과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서울기록원의 평가정책문을 수립·보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개발
-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를 토대로 한 전 평가과정의 절차화·체계화 실행을 위해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을 개발

□ 평가 업무 매뉴얼의 목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기록원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기록과 그 보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작성

- 서울기록원의 보유기록물과 관할 공공기관 생산기록물에 대해 수행하여야 하는 평가 업무를 주요 절차와 케이스에 따라 구분하고 근거와 R&R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기술하여 서울기록원이 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

□ 평가 업무 매뉴얼의 적용 범위

- 서울기록원이 관리하는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 및 준영구·영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폐기 등의 처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용
- 서울기록원의 관할기관의 업무기능에 따라 보존기간을 확정하고 미이관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경우, 참조하여 적용

□ 평가 업무 매뉴얼의 구성

- 본 매뉴얼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평가 업무의 준비, 관할기관 대상 평가 업무 실행, 서울기록원 내부 평가 업무 실행으로 업무단위 구분
- 구체적 절차는 각각의 서울기록원의 평가 업무단위마다 세부절차와 고려사항 등을 토대로 내용 구성
-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록관리업무 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2024), <2025년 기록물관리지침>(2024) 등을 참고하였으며,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평가 업무와 유관 업무인 보존기간 확정 업무 등을 종합하여 구성
- 서울기록원이 대상이므로 서울기록원 평가정책 수립(평가정책문 예시 포함)에서부터 관할기관 대상 평가 업무와 서울기록원 내 수행하는 평가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

□ 평가 업무 매뉴얼 중 평가 업무 주요 절차

- 평가 업무 준비
  - 평가정책 수립·보완
  - 평가정책 수립
  - 평가실행 요건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 평가체계 현행화

- 관할기관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현행화
- 사료적 가치 기준 재검토
- 국가기록원 평가 기준 반영 및 현행화

● 관련 전문가 발굴·운영
- 평가심의회 등 구성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 위촉

■ 관할기관 대상 평가 업무 실행

● 단위과제(업무) 보존기간 확정
- 관할기관 단위과제(업무) 보존기간 확정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 개발 및 배포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지침의 작성

● 인수 대상 기록물 지정·협의
- 사료적 가치를 토대로 인수대상 기록물 지정
- 인수대상 기록물 협의

● 미인수 기록물 평가
- 관할기관 내 보유중인 장기보존기록 평가 지원
- 관할기관 장기보존 기록물 폐기업무 시 협의
- 관할기관 폐기업무 시 원본 보존여부 협의

● 한시기관 기록물 평가
- 폐지된 한시기관에서 이관받은 기록 평가 실행

● 평가 기준에 근거한 사전 조치 실행
- 주요 사안에 대한 우선기준 마련
- 대상기록물 폐기 보류 등 조치요청 및 확인

■ 서울기록원 내 평가 업무 실행

● 평가대상 선정
- 가치평가와 법정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대상 선정

● 소장기록물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수립

● 보존기간 도래 기록물 사전 평가
- 30년 이하 소장기록물 사전 평가 실행

●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기록물 평가

- 재검토가 필요한 소장기록물 사전평가 실행

● 준영구 이상 기록물 사전평가

- 준영구 기록에 대한 사전평가 실행

● 보류기록물 사전 평가

- 기존 평가심의회에서 보류로 책정된 기록물 사전평가 실행

● 평가심의 자료 작성

- 사전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검토서 작성
- 기록원 내 의견반영 후 평가심의자료 작성

● 생산기관 의견조회

- 생산기관 의견조회 실행

● 실물검토 (예비심사) 진행

- 실물검토 진행
- 실물검토자문회의 진행(선택)

● 평가심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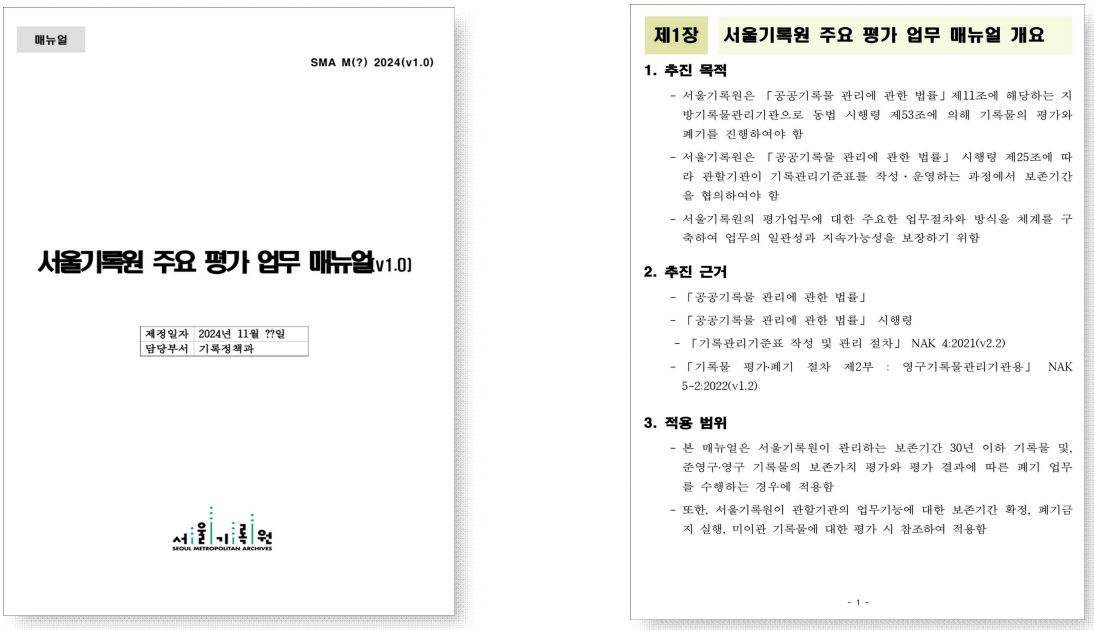
- 평가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 평가결과 반영

- 평가심의 결과 반영

● 폐기실행

- 폐기결정된 기록 폐기 실행


매뉴얼

SMA M(?) 2024(v1.0)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v1.0)

제정일자	2024년 11월 ??일
담당부서	기록정책과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제1장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 개요

1. 추진 목적

- 서울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를 진행하여야 함
- 서울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할기관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존기간을 협의하여야 함
- 서울기록원의 평가업무에 대한 주요한 업무절차와 방식을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2. 추진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NAK 4:2021(v2.2)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NAK 5-2:2022(v1.2)

3. 적용 범위

- 본 매뉴얼은 서울기록원이 관리하는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 및, 준영구·영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함
- 또한, 서울기록원이 관할기관의 업무기능에 대한 보존기간 확정, 폐기금지 실행, 미이관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시 참조하여 적용함

- 1 -

<그림 7> 서울기록원 주요 평가 업무 매뉴얼(부록)

3.3. 정보기술 기반 평가 업무 확산 방안 검토

□ 서울기록원 평가체계 중 정보화 가능 기능 검토

- 특정 서식 및 키워드 부합 여부 식별 관련 기능
  - 사전평가체계 중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주요서식 여부 확인
  - 주제 평가 중 특정 문화재, 사건 등과 연관 여부 식별
- 기록관리기준표 등과 결합한 분류 자동화 관련 기능
  -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서 자동분류
  - 공개여부 및 보안문서 식별
  - 문서편철 추천
- OCR판독을 통한 내용 인식 관련 기능
  - OCR을 통한 제목 확보 및 내용 인식
  - OCR을 통한 이미지 인식으로 문서 클러스터링
- 평가 업무절차 자동화 관련 기능
  - 3단계 평가 절차의 자동 실행

□ 기계가독형 보존기준표 관리

- 미국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기계가독형 형태이자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이지 않은 CSV(comma-separated values) 형태의 공통업무 처분일정표(GRS, General Records Schedules)를 중앙에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중요기록의 보존을 통제함
- 이를 통해 각각의 기록관들은 해당 파일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공통업무에 대한 중요기록을 관리
- 기능요건을 통해 각각의 기록관들이 사용하는 기록관리시스템과 호환가능하도록 사전에 일종의 기능요건을 제시
- 또한 미국은 아카이브 전문업체인 프리저비카(Preservica)와 협업하여, 기계학습을 이용한 OCR 솔루션을 결합하여 처분일정표 적용이나 정보자유법(FOIA)에 기반한 생산여부 및 공개여부 기록검색에 활용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CoSA, 2023)

GRS ID	Record Title	Classification (General)	Legal Citation	Disposition	Retention (Years)	Retention Type	Event Type (General)	Longer Retention Authorized?	Deviations Allowed?	Disposition Authority	Superseded by	Last Updated	Comments
GRS 1.1.001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administrative record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3	Creation_Age		Yes	Yes	DAA-GRS-2016-0013-0001		6/2023	6/2023: Corrected GRS ID.
GRS 1.1.010	Financial transaction records related to procuring goods and services, paying bills, collecting debts, and accounting - Official record held in the office of record	Financial Management	28 U.S. Code 2401(a)	Temporary	6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3-0003-0001		12/2021	
GRS 1.1.011	Financial transaction records related to procuring goods and services, paying bills, collecting debts, and accounting - All other copies (Copies used for administrative or reference purposes)	Financial Management	28 U.S. Code 2401(a)	Temporary	0	Event_Age	No longer needed	N/A	Yes	DAA-GRS-2013-0003-0002		12/2021	
GRS 1.1.012	Bids and proposals neither solicited nor accepted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0	Event_Age	No longer needed	N/A	Yes	DAA-GRS-2016-0001-0001		12/2021	
GRS 1.1.020	Records supporting compilation of agency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audit, and all records of all other report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2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3-0003-0011		12/2021	
GRS 1.1.03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E) and other asset accounting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2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3-0003-0004		12/2021	
GRS 1.1.040	Cost accounting for stores, inventory, and material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3	Creation_Age		Yes	Yes	DAA-GRS-2013-0003-0012		12/2021	
GRS 1.1.050	Construction contractors' payroll file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3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3-0003-0003		12/2021	
GRS 1.1.060	Contract appeals case file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1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6-0001-0003		12/2021	
GRS 1.1.070	Vendor and bidder information - Records of suspensions and debarments for violation of the Drug-Free Workplace Act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5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6-0001-0004		12/2021	
GRS 1.1.071	Vendor and bidder information - Records of all other suspensions and debarments and all approved vendors and bidder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3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6-0001-0005		12/2021	
GRS 1.1.080	Administrative claims by or against the United States	Financial Management	31 CFR 900-904, 28 U.S.C. 2401, 28 U.S.C. 2415(a), 31 U.S.C. 3716(c), 31 U.S.C. 3716(e)	Temporary	7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7-0005-0001		12/2021	
GRS 1.1.090	Government purchase card and travel credit card application and approval records	Financial Management		Temporary	0	Event_Age	Final action	Yes	Yes	DAA-GRS-2018-0003-0001		12/2021	

<그림 7> 미국 국립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CSV 형태의 GRS>

□ 문자판독기술(OCR)을 통한 내용인식

- 문자판독기술은 기계학습을 통한 기술과 공식(formula)기반의 기술이 있으나, 급격한 발달은 기계학습을 통한 AI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기술은 기술적 격차 자체보다 각각의 언어와 언어형태, 어순과 어법, 언어의 형태적 특징, 학습데이터의 양에 따라 차이를 발생시킴
- 현재 국가기록원의 경우 필기체나 타자체 등에 대한 OCR기술을 개발하여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습데이터가 충분히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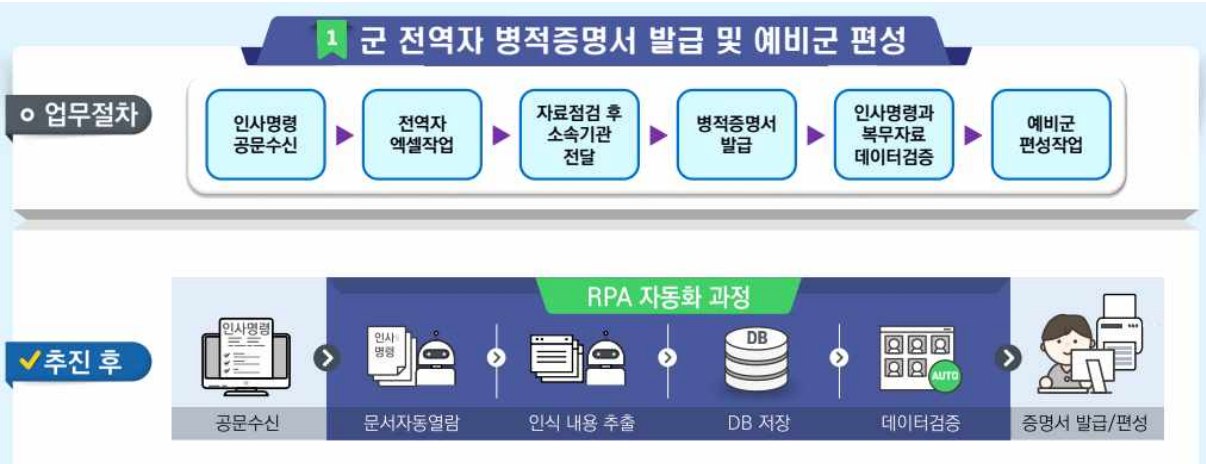


<그림 8> 2021년 김포시 OCR 사업 보정과정(안세진 외, 종이기록 데이터화를 위한 AI-OCR 적용 사례연구, 2022)

- 또한 문자 판독 이후 내용에 대한 인식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처리가 필요하므로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 타 솔루션과 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이후 한국어 기반 OCR 솔루션은 네이버 클로바 OCR, 악어디지털 KANDA AI - OCR, 로민 Document AI Platform Textscope 등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OCR 서비스는 복잡한 테이블 기반(표나 도표 등)의 보험금지급서류에 대한 인식이나 고문서 전문 인식, LLM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서울기록이 보유한 디지털 객체 형태의 기록이 OCR로 확장된다면 메타데이터 검증, 생산업무 파악 등 평가 관련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자동화

- 병무청의 경우 2023년 ‘RPA를 활용한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라는 사업을 발주하여 관련 플랫폼을 도입함
- RPA 기술은 단순·반복적인 업무수행을 자동화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나 누락·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RPA 기술은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사전평가업무 과정에서도 RPA를 활용할 경우, 평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와의 연계, 메타데이터에서 특정값의 존재유무, 특정서식 일치여부 등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음



<그림 9> 병무청 RPA 자동화 프로세스(병무청,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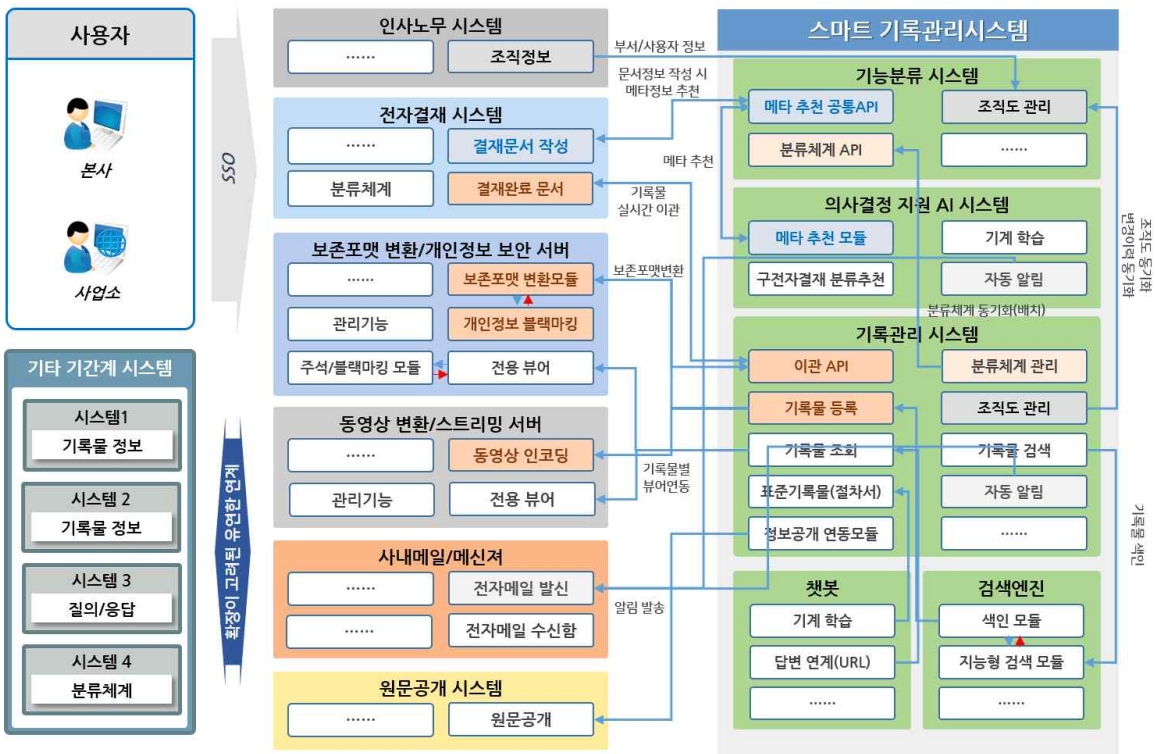


<그림 10> RPA와 OCR을 활용한 자동화 프로세스(병무청,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자료, 2021)

▪ 특히 RPA 기술은 OCR 기술이나 문서 자동분류 기술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 많은 검증이나 업무절차의 추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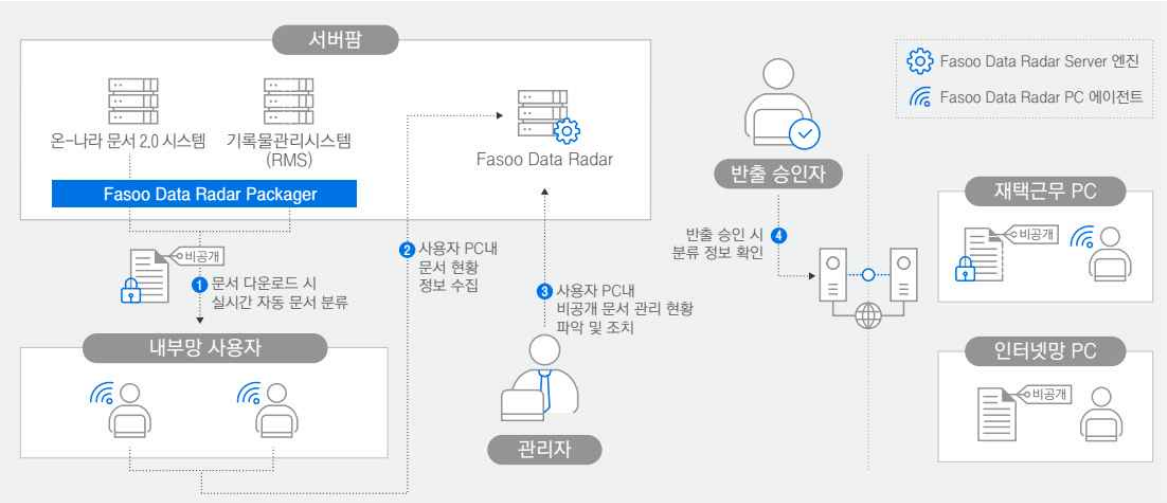
□ 문서 자동분류 기술

▪ 한국중부발전에서 2019년 도입한 지능형 기록관리시스템은 i-Works라는 이름의 전자결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기능분류시스템, 의사결정시스템이 통합된 형태로 개발됨



< 그림 11> i-Works 시스템 구성도(주현우, 현용기록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지능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중부발전 사례중심으로, 2019)

- 중부발전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정부기능연계모형(BRM)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으므로, 자체운영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함
- 자체 정부기능연계모형을 활용하면서 사업별·업무별 분류를 진행하며, 해당 과정에서 기록물의 분류추천을 진행하여 오편철을 막고 이용자의 편철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시도함
- 특히 편철 추천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기록물 추천기능을 도입하여 의미기반의 기록물 분류를 실질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동분류는 업무기능과의 연결을 통한 기능평가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관련분야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의미한 기술로 볼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온나라-시스템(2.0) 버전에도 정보보안과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서의 재분류를 실행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 온나라-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문서를 다운로드할 경우, 실시간으로 개인정보포함·비밀·비공개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 특히, 보안 차원에서 특정 서식을 감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서식에 대한 식별로도 의미가 있음
- 이러한 기술은, 법정서식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방식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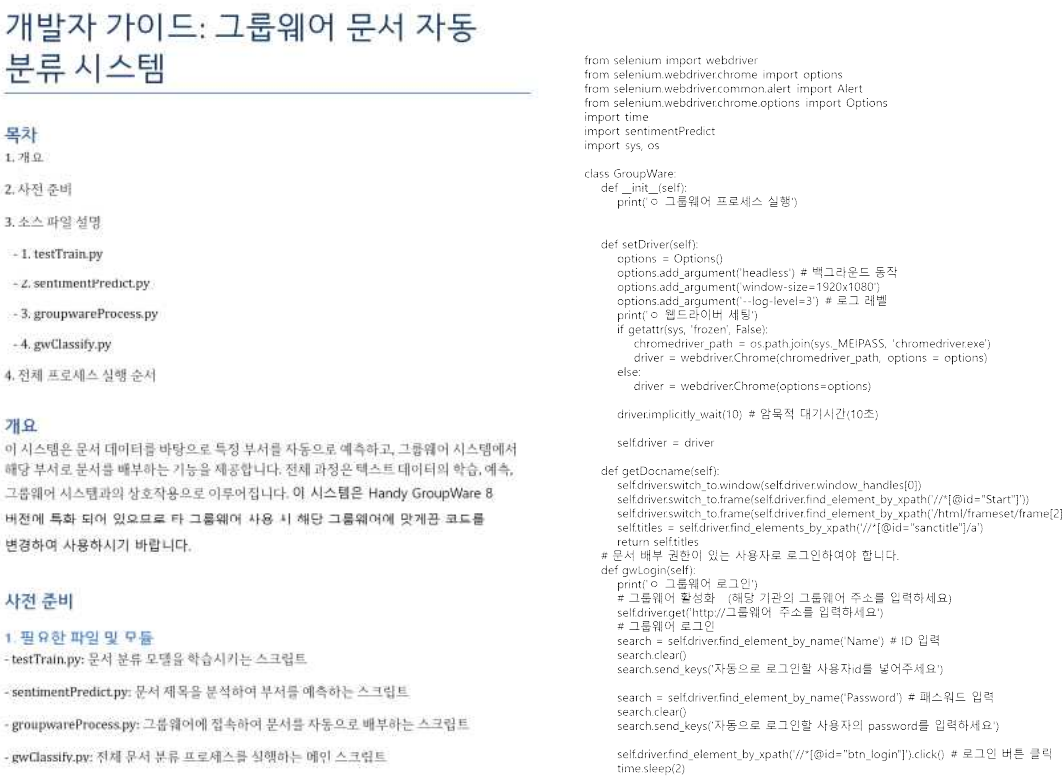


<그림 12> Fasoo의 Data Radar 솔루션의 공공기관 적용 사례(Fasoo 홈페이지)

- 이와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문서 자동 배부시스템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 해당 소스코드는 문서의 제목에 기반하여 학습을 통해 적합한 부서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문서의 편철방식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기록의 생산부서를 찾는 방식 외에도, 업무분류의 학습모델로도 의미있다고 볼 수 있음



개발자 가이드: 그룹웨어 문서 자동 분류 시스템

목차

1. 개요
2. 사전 준비
3. 소스 파일 설명
   - 1. testTrain.py
   - 2. sentimentPredict.py
   - 3. groupwareProcess.py
   - 4. gwClassify.py
4. 전체 프로세스 실행 순서

개요

이 시스템은 문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부서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해당 부서로 문서를 배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체 과정은 텍스트 데이터의 학습, 예측, 그룹웨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Handy GroupWare 8 버전에 특화 되어 있으므로 타 그룹웨어 사용 시 해당 그룹웨어에 맞게끔 코드를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1. 필요한 파일 및 모듈
- testTrain.py: 문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스크립트
- sentimentPredict.py: 문서 제목을 분석하여 부서를 예측하는 스크립트
- groupwareProcess.py: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배부하는 스크립트
- gwClassify.py: 전체 문서 분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메인 스크립트

```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from selenium.webdriver.chrome import options
from selenium.webdriver.common.alert import Alert
from selenium.webdriver.chrome.options import Options
import time
import sentimentPredict
import sys, os

class GroupWare:
    def __init__(self):
        print('☺ 그룹웨어 프로세스 실행')


    def setDriver(self):
        options = Options()
        options.add_argument('headless') # 백그라운드 동작
        options.add_argument('window-size=1920x1080')
        options.add_argument('--log-level=3') # 로그 레벨
        print('☺ 웹드라이버 세팅')
        if getattr(sys, 'frozen', False):
            chromedriver_path = os.path.join(sys._MEIPASS, 'chromedriver.exe')
            driver = webdriver.Chrome(chromedriver_path, options = options)
        else:
            driver = webdriver.Chrome(options=options)

        driver.implicitly_wait(10) # 암묵적 대기시간(10초)

        self.driver = driver

    def getDocname(self):
        self.driver.switch_to.window(self.driver.window_handles[0])
        self.driver.switch_to.frame(self.driver.find_element_by_xpath('//*[@id="Start"]'))
        self.driver.switch_to.frame(self.driver.find_element_by_xpath('/html/frameset/frame[2]'))
        self.titles = self.driver.find_elements_by_xpath('//*[@id="sanctitle"]/a')
        return self.titles
    # 문서 배부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def gwLogin(self):
        print('☺ 그룹웨어 로그인')
        # 그룹웨어 활성화 (해당 기관의 그룹웨어 주소를 입력하세요)
        self.driver.get('http://그룹웨어 주소를 입력하세요')
        # 그룹웨어 로그인
        search = self.driver.find_element_by_name('Name') # ID 입력
        search.clear()
        search.send_keys('자동으로 로그인할 사용자id를 넣어주세요')

        search = self.driver.find_element_by_name('Password') # 패스워드 입력
        search.clear()
        search.send_keys('자동으로 로그인할 사용자의 password를 입력하세요')

        self.driver.find_element_by_xpath('//*[@id="btn_login"]').click() # 로그인 버튼 클릭
        time.sleep(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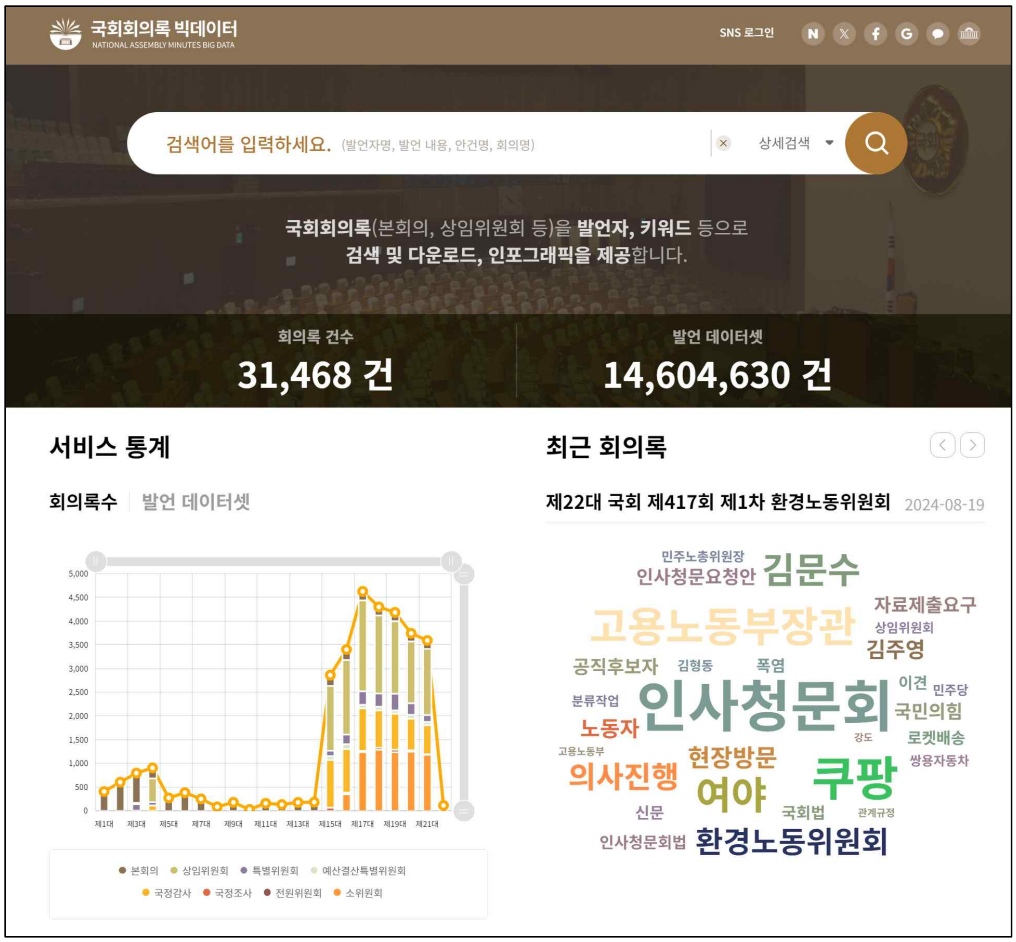
<그림 13> 전북개발공사의 전자문서 자동 배부시스템 가이드와 소스코드(공공데이터포털, 2024)

□ 색인어 추출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결

- 기록관리 차원에서 색인어를 추출하는 기능은 검색엔진의 도입으로 대중화되었으나, 색인어의 인식이나 추출은 언어의 코퍼스(corpus)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기술임
- 현재 국가기록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 및 사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연계하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규격을 준수하여 제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호환성 검증을 주관하고 있으며, 호환성 통과를 위해서는 색인에 대한 관리기능과 조회 기능 외에도 대규모 분산처리를 통해 검색효율을 제공하여야 함
- 특히 데이터의 폭증과 함께 색인이 얼마나 유의미한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색인이 포함된 기록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색인은 주로 크롤러(Crawler) 형태의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확보하며, 확

보한 색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는 형태로 작동함

- 이 과정에서 형태소분석과 복합명사 여부 확인, 불용어 제거, 색인어 확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는 코퍼스의 품질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색인어 추출은 유의미한 색인어를 인식하고, 관련한 문서를 연결하여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특정 주제와의 연결에 유의미한 기술로 볼 수 있음
- 공공부문에서 색인어 추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로는 2021년 오픈한 국회도서관의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들 수 있음
- 해당 서비스는 발언 내용에서 생성된 키워드를 통해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발언자나 발언 내용에 대한 분석기능을 제공함
- 또한 행정이나 정책에 최적화된 형태의 코퍼스를 사용하여 색인어 생성과 검색에 대한 효율을 높였으며, 이는 기록과 주제와의 연결가능성에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4>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시스템

□ 플랫폼 운영을 통한 기록 평가 지원

- 서울기록원에서 자치구 등 관할기관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사전평가 단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를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서울기록원과 관할기관 간의 관계에서 확장하여 각 관할기관끼리도 한 곳에 평가를 위한 최신 정보와 도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올리고, 보존기간 참고가 필요한 단위과제(단위업무) 등을 쉽게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참조하는 형태를 제공
- 바르셀로나시가 개발한 데시딤(Decidim)은 오픈소스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시민 제안을 수렴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을 핵심 기능으로 보유
- 참여 프로세스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토론과 투표 기능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원
- 상세한 의사결정 및 협업 기능을 통해 상시적으로 회의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통채널을 활성화
- 최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정보 공유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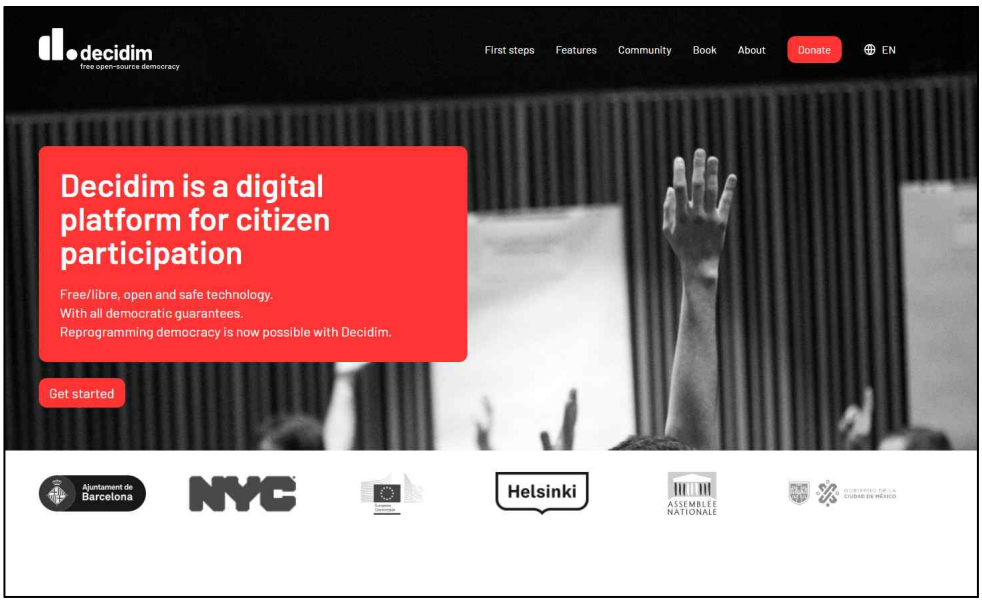


그림 20 데시딤(Decidim) 웹사이트

- 기록 평가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기능
  - 데시딤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울기록원과 관할기관에서 기관별 기록 평가 사례, 심의 기준, 참고 문서 등을 온라인에서 공유 가능하게

설계하고 자치구 등 관할기관 간 데이터를 상호 참조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 각 기관별 기록 평가 사례, 심의 기준, 참고 문서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공유
- 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 가능
- 평가와 관련된 법령, 기록관리기준표, 폐기 예정 목록 등을 플랫폼에서 열람 가능
- 서울기록원의 경우 평가정책과 보존기간 책정에 활용한 지침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관할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례와 평가 결과를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음

■ 토론 및 투표 기능을 활용한 기록 평가를 위한 협의·심의 프로세스 운영

- 보존기간 관련 참고자료(법령, 기록관리기준표, 유사 기관 사례 등)를 플랫폼에 공유하고 보존기간 일원화를 위한 기관 간 토론 및 투표 기능을 추가하여 평가 기준과 보존기간을 조율하고 관할기관이 이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기관 간 보존기간 조율을 위한 토론 게시판 개설
- 보존기간 관련 이슈에 대해 투표 기능 활용하여 의사결정
- 온라인에서 실시간 의견 수렴 후 반영하여 평가 기준 결정
- 기관별로 책정한 보존기간을 공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 개설
- 보존기간을 일원화하기 위해 투표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 결정
- 심의 중 변경된 보존기간 기준을 플랫폼에서 자동 업데이트

■ 이력 관리 및 실시간 공유 기능을 활용한 기록 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

-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보존기간 책정 데이터, 평가 기준 업데이트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기록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 가능
-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데이터(보존기간, 평가 기준 등)를 실시간 업데이트
-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전 버전과 비교 가능
- 기관별 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
- 보존기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안건과 변경 이력 확인 가능
- 보존기간 변경 전후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평가의 일관성 유지
- 각 기관별 기록 평가 과정과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

■ 회의 및 워크숍 기능을 활용한 평가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평가 담당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심의 기준 변경 사항을 공유하는 웨비나(Webinar) 및 교육 세션 운영
- 기록 평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세미나 영상 공유
-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의 평가 방식을 논의하고 피드백 제공

■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고시, 공유함으로써 보존기간 책정에 필요한 법령 정보, 각 관할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현황, 폐기 예정 목록 등을 공유하여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필요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

3.4. 평가 성과 확산

□ 기록물평가 사례발표회 개최

-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개발한 사전평가 체계 및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에 대한 사례발표회 개최
  -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에 대한 소개,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의 도입 배경 안내,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의 주요 내용, 향후 활용방안 등을 소개
  - 사례발표회 및 이에 대한 의견조회,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수행
  - 의견조회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 도출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사항 검토 및 논의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자치구 대상 평가 기준 보완 방향 도출
- 사전평가 체계와 사전평가 방법의 자치구 등 관할기관 시범 적용을 통해 평가 성과 확산
- 평가체계의 적용 범위를 관할기관으로 확장하여 서울기록원이 장기보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그림 15> 자치구 대상 평가기준 사례발표회 사진

□ 자치구 대상 평가기준 사례발표회 자치구 주요의견

- 기준서 자치구 적용
  - 기록물이 단위과제카드로 구분되지 않아 별도 단위과제 분리가 힘듦
  - 기준서 보존기간에 따른 단위과제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합동평가 업무 등으로 자치구 전체의 기준서에 따른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는 어려움
- ‘등록’ 업무 기록물 기준서 포함 여부

- ‘등록’ 관련 기록물은 관광체육과 기록물이 가장 많음
- ‘등록’ 관련 기록물은 사후 평가심의회를 통해 보존기간 상향하는 것으로 충분함
- 장기보존이 필요한 ‘등록’ 업종의 기준은 다중인파 관리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등록’ 관련 기록물은 전자기록물로 생산되는 것이 많음

▪ 그 밖의 논의사항

- 주택 ‘사용검사’ 기록물과 건물 ‘사용승인’ 기록물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생산부서 의견조회가 추가로 요구됨
- 보존기간 준영구로 책정된 ‘이륜자동차대장’(법규기반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하향하는 것이 적절함

□ 자치구 대상 평가기준 사례발표회 이후 산출물 반영사항

▪ ‘등록’ 업무 관련 기록유형은 기준서 상 전체 제외(총 43개)

▪ 이륜자동차대장(법규기반), 사용검사(업무기반) 기록유형은 자치구 추가 의견 조회 필요

4. 사전평가 검토서 작성

4.1. 검토서 작성 대상 및 수량

□ 검토서 대상 선정 및 실물 검토

- 기록물 평가심의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기반의 사전평가 검토서는 사전평가를 수행한 기록물 중 평가심의회 대상에 포함된 분야의 기록물 선정
- '21~'24년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대상 기록물 중 기존에 선정된 도시개발 분야와 추가 선정된 교통 분야 기록물 총 78,256건 실물 검토
  - 도시개발 분야의 경우 도로건설 기록물, 지구별 토지구획정리 기록물, 도시건설 기록물, 도시정비사업 기록물, 도시계획위원회 기록물, 토지수용재결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 분야의 경우 교통시설 기록물,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수용관리 기록물 등으로 구성
  - 도면, 회의록, 정책자료집 등의 유형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기록물 검토
  - 회의록의 경우 주요 안건 중심으로 검토
  - 도면의 경우 어떠한 공간, 건물, 시설에 대한 도면인지를 확인
  - 정책자료집의 경우 그 주제에 대해 검토
  - 토지수용재결서, 소유권이전등기, 환지, 교통영향평가서 등 동종대량 기록물의 경우 서식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

□ 검토서 작성 단위 설정

- 기록물의 배경, 내용, 맥락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검토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집합적 정보제공으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성 단위 설정
  - 서울기록원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며, 시리즈 1개 전체를 하나의 검토서로 작성
  - 시리즈 1개를 보존기간 또는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
  - 보존기간의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법정평가 대상과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으로 구분
  - 사전평가 결과의 경우 장기보존, 실물평가권고, 폐기권고로 구분

- 동종대량 기록물의 통합을 기준으로 검토서 작성
- 업무기능 및 프로세스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검토서 작성
- 업무기능이 같거나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고 생산량이 많지 않은 기록 철의 경우 하나의 검토서로 작성

<표 33> 사전평가 검토서 작성 단위

관리번호	분야	사전평가 검토서		
PER001_1	도시개발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1_2	도시개발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01_3	도시개발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02_1	도시개발	건설 및 건축 분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2_2	도시개발	건설 및 건축 분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03_1	도시개발	광역도시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3_2	도시개발	광역도시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법정평가 대상
PER004_1	도시개발	교량건설 중 교량공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4_2	도시개발	교량건설 중 교량공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04_3	도시개발	교량건설 중 교량공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04_4	도시개발	교량건설 중 교량공사 관련 정책자료집	장기보존	
PER005_1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공항 계획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5_2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공항 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06_1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도로 계획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6_2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도로 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07_1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운하 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8_1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주차장 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9_1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철도 계획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09_2	도시개발	교통시설 중 철도 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10_1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공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0_2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공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10_3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공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10_4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공사 관련 정책자료집	장기보존	
PER011_1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시설물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1_2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시설물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11_3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시설물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11_4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시설물 관련 정책자료집	장기보존	
PER012_1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도로정비 및 관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관리번호	분야	사전평가 검토서		
PER013_1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토지수용재결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3_2	도시개발	도로건설 중 토지수용재결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14_1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4_2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반기록물	폐기권고	
PER015_1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중 택지개발사업 계획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5_2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중 택지개발사업 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16_1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중 형질변경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7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건설업 관련 면허 관리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7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건설업 관련 면허 관리 기록물	폐기권고	
PER018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국유재산 관리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8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국유재산 관리 기록물	장기보존	
PER018_3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국유재산 관리 기록물	폐기권고	
PER019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배상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19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배상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20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보상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0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보상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20_3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보상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21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사유재산관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1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사유재산관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22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예산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2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예산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22_3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예산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23_1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행정지원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3_2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행정지원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23_3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행정지원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23_4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행정지원 관련 일반 기록물	장기보존	
PER023_5	도시개발	도시건설 중 행정지원 관련 일반 기록물	폐기권고	
PER024_1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민원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5_1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법령검토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법정평가 대상
PER025_2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법령검토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5_3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법령검토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26_1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용역관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6_2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용역관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법정평가 대상
PER026_3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용역관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6_4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 용역관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법정평가 대상

관리번호	분야	사전평가 검토서		
PER027_1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계획과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8_1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일반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8_2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PER028_3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일반기록물	폐기권고	
PER029_1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업무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9_2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업무 기록물	장기보존	
PER029_3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업무 기록물	폐기권고	
PER029_4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업무 기록물	장기보존	법정평가 대상
PER029_5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업무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PER029_6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일반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29_7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일반 기록물	장기보존	
PER029_8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일반 기록물	폐기권고	
PER030_1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일반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0_2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PER030_3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일반기록물	폐기권고	
PER031_1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대내외 협의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1_2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대내외 협의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31_3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일반기록물	실물평가권고	
PER031_4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PER031_5	도시개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일반기록물	폐기권고	
PER032_1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건설 중 토지수용재결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3_1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관련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4_1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관리카드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5_1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5_2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35_3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36_1	도시개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6_2	도시개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회의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PER036_3	도시개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회의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37_1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7_2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38_1	도시개발	도시철도 건설 관련 토지수용재결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8_2	도시개발	도시철도 건설 관련 토지수용재결 기록물	장기보존	
PER039_1	도시개발	도시철도 건설 및 관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39_2	도시개발	도시철도 건설 및 관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관리번호	분야	사전평가 검토서		
PER039_3	도시개발	도시철도 건설 및 관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40_1	도시개발	도시철도 공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0_2	도시개발	도시철도 공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41_1	도시개발	자치구도시기본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법정평가 대상
PER041_2	도시개발	자치구도시기본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2_1	도시개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2_2	도시개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43_1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설계지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4_1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중 상세계획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4_2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중 상세계획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45_1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회의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6_1	도시개발	토지수용재결 관련 일반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6_2	도시개발	토지수용재결 관련 일반기록물	장기보존	
PER046_3	도시개발	토지수용재결 관련 일반기록물	폐기권고	
PER047_1	도시개발	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7_2	도시개발	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48_1	도시개발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8_2	도시개발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48_3	도시개발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49_1	도시개발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49_2	도시개발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0_1	도시개발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0_2	도시개발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1_1	도시개발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1_2	도시개발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1_3	도시개발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52_1	도시개발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2_2	도시개발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3_1	도시개발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3_2	도시개발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54_1	도시개발	서울 동남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4_2	도시개발	서울 동남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5_1	도시개발	서울 동북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5_2	도시개발	서울 동북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5_3	도시개발	서울 동북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관리번호	분야	사전평가 검토서		
PER056_1	도시개발	서울 서남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6_2	도시개발	서울 서남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7_1	도시개발	서울 서북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7_2	도시개발	서울 서북권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8_1	도시개발	시흥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8_2	도시개발	시흥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59_1	도시개발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59_2	도시개발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0_1	도시개발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0_2	도시개발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1_1	도시개발	청량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1_2	도시개발	청량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1_3	도시개발	청량리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62_1	도시개발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2_2	도시개발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3_1	교통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3_2	교통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4_1	교통	공공공지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4_2	교통	공공공지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5_1	교통	공업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6_1	교통	교통운영 중 교통신호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6_2	교통	교통운영 중 교통신호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67_1	교통	도로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7_2	교통	도로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8_1	교통	도시계획사업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8_2	교통	도시계획사업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69_1	교통	도시철도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69_2	교통	도시철도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0_1	교통	문화·체육·종교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0_2	교통	문화·체육·종교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1_1	교통	물류관리 중 화물 면허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1_2	교통	물류관리 중 화물 면허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2_1	교통	버스관리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2_2	교통	버스관리 관련 정책자료집	장기보존	
PER073_1	교통	보건위생시설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관리번호	분야	사전평가 검토서		
PER073_2	교통	보건위생시설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4_1	교통	상업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4_2	교통	상업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5_1	교통	숙박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5_2	교통	숙박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6_1	교통	업무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6_2	교통	업무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7_1	교통	유통공급시설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7_2	교통	유통공급시설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8_1	교통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8_2	교통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79_1	교통	주택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79_2	교통	주택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80_1	교통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80_2	교통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80_3	교통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PER081_1	교통	택시관리 중 면허 관련 기록물	실물평가권고	보존기간 재검토 대상
PER081_2	교통	택시관리 중 면허 관련 기록물	장기보존	
PER081_3	교통	택시관리 중 면허 관련 기록물	폐기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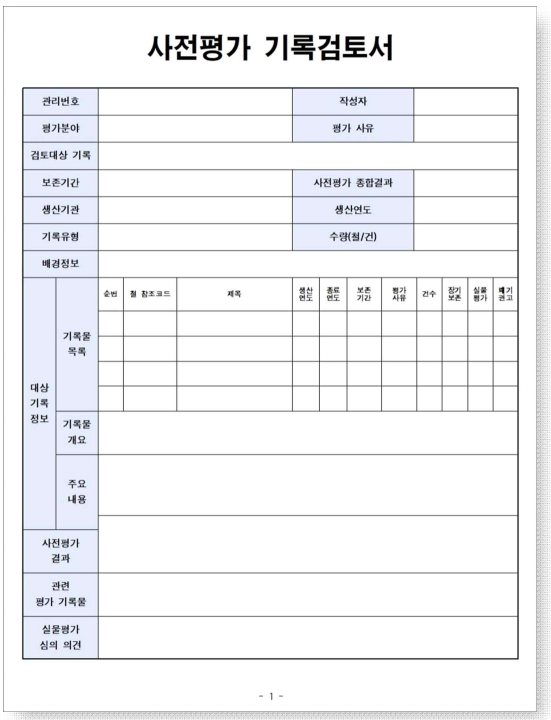
□ 검토서 구조 및 내용 설정

▪ 사전평가 결과 외 서울기록원 정리기술 사업 결과물(시리즈 기술, 리서치가이드, 카탈로그 북 등), 전거, 참고정보원 등 기록물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종합하여 구조 및 내용 설정

- 관리번호: 사전평가 기록검토서 관리번호
- 작성자: 사전평가 기록검토서 작성자
- 평가 분야: 평가 대상 기록의 분야
- 평가 사유: 해당 기록물의 평가 사유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법정평가 대상과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재평가가 필요한 ㉡가치평가 대상으로 구분하며, ㉠과 ㉡ 중 선택하여 기입
- 검토대상 기록: 사전평가 기록검토서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
- 보존기간: 평가 대상 기록의 보존기간
- 사전평가 종합결과: 사전평가에 따른 최종 결과(장기보존, 실물평가권고, 폐기권고)

- 생산기관: 평가 대상 기록의 생산기관명(존속기간)
- 생산연도: 평가 대상 기록의 생산연도
- 기록유형: 평가 대상 기록물의 유형
- 수량(철/건): 해당 검토서에 포함되는 평가대상 기록물의 수량
- 배경정보: 검토서 내 평가 대상 기록물에 대한 배경정보로서 관련 주제 및 사건, 관련 법령 등을 서술
- 대상 기록 정보: 기록물 목록, 기록물 개요, 주요 내용으로 구성
- 기록물 목록: 검토서에 포함되는 평가 대상 기록물의 목록
- 기록물 개요: 검토서에 포함되는 평가 대상 기록물의 배경 및 맥락을 설명
- 주요 내용: 기록물의 내용과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동종대량, 도면, 이미지, 회의록 등 기록의 서식이나 유사성이 있는 기록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묶어 설명
- 사전평가 결과: 사전평가 결과의 종합 및 단계별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반복되거나 특이점이 있는 사항 중심으로 작성
- 관련 평가 기록물: 해당 검토서와 관련 있는 검토서 리스트
- 실물평가 심의 의견: 실물평가 권고 검토서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실물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의견을 기입

■ 이에 따라 평가 대상 기록물의 보존 가치 재평가를 고려하여 상세한 검토서 작성



사전평가 기록검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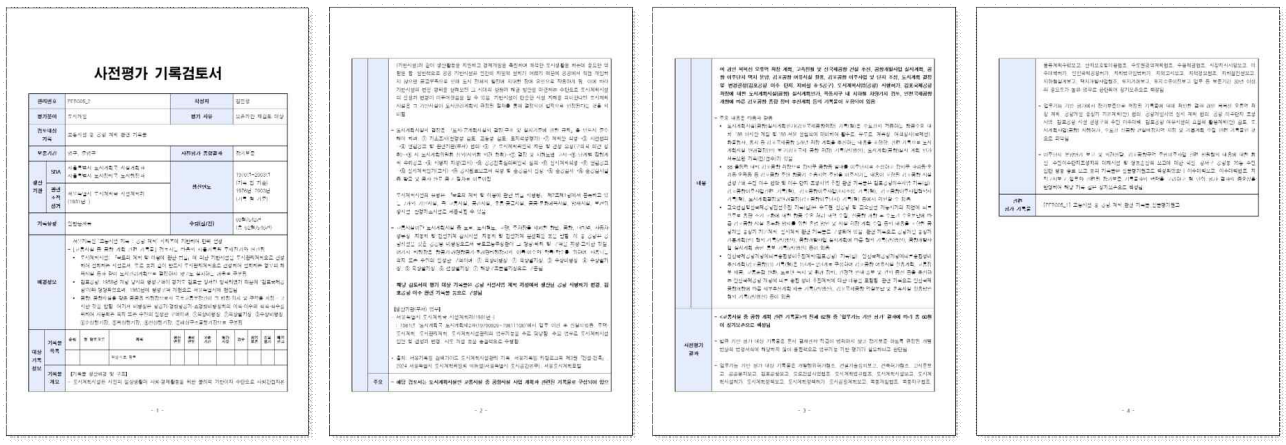
관리번호					작성자							
평가분야					평가 사유							
검토대상 기록												
보존기간					사전평가 종합결과							
생산기관					생산연도							
기록유형					수량(철/건)							
배경정보												
대상 기록 정보	기록물 목록	순번	철 참조코드	제목	생산 연도	종료 연도	보존 기간	평가 사유	건수	장기 보존	심층 평가	폐기 권고
	기록물 개요											
	주요 내용											
사전평가 결과												
관련 평가 기록물												
실물평가 심의 의견												

- 1 -

<그림 22> 사전평가 검토서 서식

4.2. 작성 결과

- 도시개발 분야 62개 세트 148건, 교통 분야 19개 세트 39건 총 81개 세트 187건 검토서 작성 완료



<그림 16> 교통시설 중 공항 계획 관련 기록물 사전평가 검토서(예시)

5. 기록물 해설서 제작

5.1. 제작 목적 및 방향

□ 제작 목적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한 관련 법령(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 2)에 부합하는 법정활동의 수행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기록물 평가사업의 추진 배경과 결과,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함
- 서울기록원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소장기록물 분야별 평가 작업인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모델’을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
- 전문가 평가심의를 통해 해당 분야 주요 기록물로 책정된 기록물을 시민 친화적 콘텐츠로 개발, ‘서비스’와 ‘활용’이라는 기록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
- 소장기록물 콘텐츠 개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아카이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에 기여함

□ 제작 방향

- 간행물 형태로 발간
  - 텍스트, 이미지 등을 통해 기록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해 디자인
  - 도시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장소에 대해 맥락을 고려한 기술
  - 주제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반영한 정리·기술(Description)을 구현하는 동시에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해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임
- 평가시스템 이해를 돕는 ‘서울평 평가모델’의 기획 배경과 과정 소개
  - 기록물 평가과정의 체계화, 고도화를 시도한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인 사전평가 기록검토서를 소개함. 이를 통해 기록물 생산 배경 및 구조, 설치 근거, 기록의 정량적 수치 중심의 구조에서 출발하지만 대주제를 관통하는 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평가 분야 등 기록의 평가를 위해 작성된 평가 관련 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대시민 눈높이에 맞게 전반적 설명 기술
- 기록물과 사건 및 사회문화적 주요 변화와 연계

- 기존의 생산 배경 중심이 아닌 주제 분야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과 역사, 사회문화적 성취와 의미, 주요 변화 등을 연계해 정리하는 컨텐스트 서술 방식을 통해 해당 주제 분야 및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 주제 분야와 주요 기록물에 대한 해설 중심

- 정보 전달 위주의 객관적인 기록물 소개 방식을 지양하고 서울시의 도시개발 분야가 추구해온 지향은 물론 당시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진행해 온 발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록물 및 기록관리에 대한 시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의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주제와 함께 기록의 주요 내용과 기록 자체에 대한 해설을 중점으로 기술

▪ 주제 분야 전문가의 참여

-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해당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역사적 흐름, 참고사항, 사실 검증 등 수행함

□ 주요 내용 및 구조

<표 34> 해설서 구성안

구성	내용
인트로	• 서문 등
PART 1 (도시개발 분야 4개 주제 기록물)	#1.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 - 주제별 특성, 주요 정책과 사건, 시기별 사회문화적 변화 등 도시사적 의미 *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본 평가사업 대상 기록물(서울기록원 소장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관련성 높은 외부 자료의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 고려
	#2. 주제별 주요 기록물(3건) 해설 - 선정 주제 기록물 중 상대적으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주요 기록물 3건 선정 후 생산시기, 형식, 내용 등 기본정보와 내용 등을 제공해 기록물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정책이나 사업 배경 등 생산 맥락을 친절하게 해설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고 * 해설서에 포함되는 기록물은 1994년 이전 생산된 기록물(30년 경과 기록물)로 선정
PART 2 (메타데이터 기반	• 기록물 평가사업의 체계화·고도화를 시도한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모델'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성과 등 소개

구성	내용
사전평가 모델에 대한 이해)	
부록	• PART 1, 2 내용 관련 각주 • 주제별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목록

□ 해설서 기획 과정

- 2024 기록물 평가심의 영역으로 '도시개발' 분야 선정
- '도시개발' 분야 기록물에 대한 사전평가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심의 후 주제와 컨텍스트를 서사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키워드 추출
- 주요 기록물 선정 작업 수행
- 주요 기록물 선정 기반 6개 주제 채택 및 최종 4개 주제 콘텐츠화 진행
  -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조성과 현재
  - 88서울올림픽 관련 시설 조성과 현재
  - 계획도시 여의도의 광장과 공원
  - 구로공단과 국가산업단지의 형성과 현재
  - 내자호텔과 사직로를 통해 본 세종로의 변화(2권 반영 예정)
  - 김포공항의 조성과 확장(2권 반영 예정)
- 전문 필자 섭외 및 주제별 콘텐츠 의뢰
- 주제별 콘텐츠 에디팅
- 콘텐츠 편집디자인, 인쇄 및 제본 등 해설서 간행물 제작

	구분	내용	비고(분량 등)
1	표지	표지	
2	서문	서문(발간사)	*일러두기
3	목차	목차	
4	PART1_ 기록 그리고 서울	PART1 장대문	2p
		주제1_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도심 한복판 '녹색 허파'의 탄생 여정** =인트로 =본문	35p 내외

	구분	내용	비고(분량 등)
		#1 :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기록 이야기 #2 : 주요 기록물로 만나는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기타 : 인포그래픽	
		주제2_ 88서울올림픽과 대규모 도시 개발 88올림픽이 쏘아올린 서울의 변혁 =인트로 =본문 #1 : 기록으로 보는 88서울올림픽이라는 사건 #2 : 주요 기록물로 만나는 88서울올림픽 시설 =기타 : 인포그래픽	35p 내외
		주제3_ 철저한 계획도시 여의도와 광장 공원에 담긴 '스펙터클 광장'의 추억 =인트로 =본문 #1 : 기록으로 보는 여의도 광장과 공원 #2 : 주요 기록물로 만나는 여의도와 광장 =기타 : 인포그래픽	35p 내외
		주제4_ 구로 일대 수출산업단지의 형성 농경지에서 공단 거쳐 G밸리가 되다 =인트로 =본문 #1 : 기록으로 보는 구로 일대 수출산업단지 #2 : 주요 기록물로 만나는 구로 수출산업단지 =기타 : 인포그래픽	35p 내외
5	**PART2_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이해하기**	PART2 장대문	2p
		메타데이터 기반 사전평가 모델을 소개합니다	8p 내외
6	부록	-각주 : 통합 정리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사용 목록 총정리	

□ 필진 구성

주제	필자	소개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성과 변화	길지혜	조경 전공 연구자들의 자율 연구집단 '도시경관연구회 BoLA'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0~2021년 서울시 푸른도시국(현 정원도시국), 서울기록원과 협력해 남산공원과 보라매공원, 용산가족공원 기록을 정리·기술하면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도시공원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88서울올림픽과 대규모 도시 개발	신명진	미술사와 도시 조경을 전공하며 국내외 도시경관의 탄생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밖에도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와 도시의 예술 실천에 관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고, '탈산업 도시 경관의 진정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중소도시의 지역성과 관계인구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계획도시 여의도의 광장과 공원	한승지	연세대학교에서 문화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있다. <5.16광장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공간사의 관계적 구성> 등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의 교차, 도시공간의 역사를 토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포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구로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형성	최혁규	문화이론을 공부하며 도시와 산업 공간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하고 있다. <사물에 수작 부리기: 손과 기술의 감각, 제작 문화를 말하다>,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장사동, 입정동, 산림동>을 공저했고,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 기록화>, <G밸리 산업 변화 조사 및 기록화>, <소사공단: 기계를 짓는 공장> 아카이브 전시 등에 참여했다.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생애 서사와 행위 전략 : 청계천 기계공구 상가 일대 금속가공 기술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등의 논문을 썼다.
내자호텔과 사직로를 중심으로 본 세종로의 변화	기세황	서울대에서 건축을 전공한 공학박사이다. 오래된 건축과 도시를 연구하며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오래된 도시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 <1960년대 대한문의 변경 계획에 따른 도시 유산 보존 논의> 등의 논문을 썼다. 현재 연구교수, 대학강사, 공학박사, 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김포공항의 조성과 변화	안근철	'장소기억 프로젝트'의 대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이다.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문화재 관련 실무를 경험했고, 현재는 도시와 산업유산 관련 수집 및 기록작업을 한다. <기능체계의 관점으로 본 산업유산 재현방식 연구: 서울시 폐정수장을 중심으로>, <개인 기록을 통해 본 도심산업생태계 연구: 입정동 00주물 거래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등을 썼다.

***위 주제 중 '내자호텔과 사직로를 중심으로 본 세종로의 변화'와 '김포공항의 조성과 변화'는 다음에 제작될 <기록물 해설서2>에서 담기로 함**

5.2. 해설서 제작 과정

□ 기획·편집 및 디자인

- 해설서 제작 사양은 표지 포함 150p 전후, 제작 부수는 300부로 함
- 주제별 구성 기획 및 콘텐츠 형식과 관련한 작성 가이드를 필자에 제공함

콘텐츠 구성을 위한 필자 가이드
1. 주제별 주요 구성 내용을 위한 안내 (#1) 개별 주제에 대한 이해 ①주요 기록물 평가심의 결과 개괄 -도시개발 분야 기록물 전체 중 개별 주제 관련 기록물 규모(철건 등), 이 중 사용한 기록물 수 등 -이 부분은 필자들께 설명 드리고 추후 에디팅 과정에서 취합해 일괄 적용 예정 ②개별 주제에 대한 이해 -주제 영역 관련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배경에 대한 풍부한 서술 -기록물을 연결한 생산 맥락 설명 (#2) 주요 기록물 3건 ①선정 이유 : 주제 기록물 중 3건의 주요 기록물을 선정한 이유(필자별 해당 기록물이 주제의 어떤 면, 어떤 부분, 어떤 의미를 증거 혹은 기록하고 있기에 선정하였는지 소개) ②주요 기록물 이미지+메타데이터 제목, 식별번호, 철 제목, 건 제목, 생산시기, 생산부서, 출처(소장처는 출처로 통일. 필요한 경우 링크 포함 기재) 순으로 정리 ③주요 기록물 해제 :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 ④주요 기록물 해설 : 위 ③내용 포함해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 및 당시 상황, 정책 추진 배경, 기록물에 담긴 시대적 맥락 등 풍부한 설명과 해설
2. 원고 작성을 위한 가이드 (1) 원고 개요 • 분량 : A4 기준 13~15쪽(한글, 글자 크기 10p, 행간 160% 기준) (*분량은 기록물 이미지, 메타데이터 정보는 제외한 순수한 본문 원고임. 기록물 이미지, 메타데이터 정보는 본문 내 관련 내용과 연결해 배치하고 별도 정리) (2) 원고 작성 • 원고 구성은 선정 주제와 관련해 당시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배경 등을 개괄하고, 기록물이 생산된 시기의 업무 과정과 정책적 의미(생산 맥락), 이와 연결된 기록물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하되 서사적으로 서술합니다.

- 해당 주제 기록물의 생산 시기가 사업의 초기, 중기 등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술은 시간 순으로 하되 업무 추진과 기록물의 생산 시기를 연결해 탄력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 전체 본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상세히, 비중있게 기술해 주세요. 참고자료 중 <아카이브 서울 vol.2>에 소개한 '효창공원' 사례처럼 기록물에 담긴 특정 내용의 의미를 부각하거나 세밀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가능하시면 시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공하는 기록물 중 글의 흐름에 맞는 기록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록물의 수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기 제공 기록물 외 추가 기록물이 확보될 경우, 필자가 추가로 발견한 기록물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울기록원에 요청해 제공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원고 작성 시 전체 제목과 부제, 본문 1쪽당 1개 이상의 중간 제목을 달아주세요. 에디팅 과정에서 하는 작업이지만 필자들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기에 주요 내용을 압축한 제목을 1차로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록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위한 간행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문용어는 기술하되 최대한 쉽고 가독성 높은 문장으로 서술해주세요. 이를 위해 기록물의 배경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스토리텔링 방식과 접목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 기록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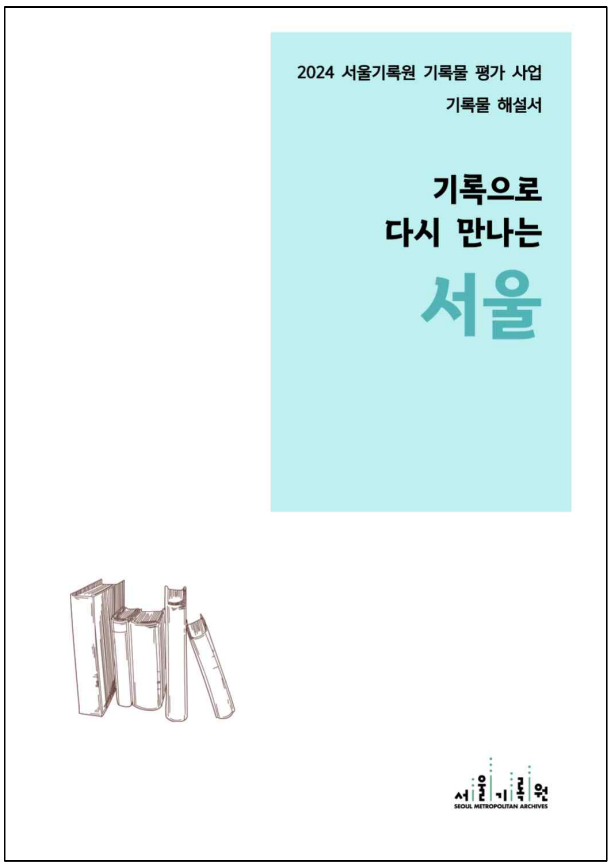
- 관련 주제별 주요 기록물 선정 및 공개 여부 확인
- 주제별 선정 기록물 공개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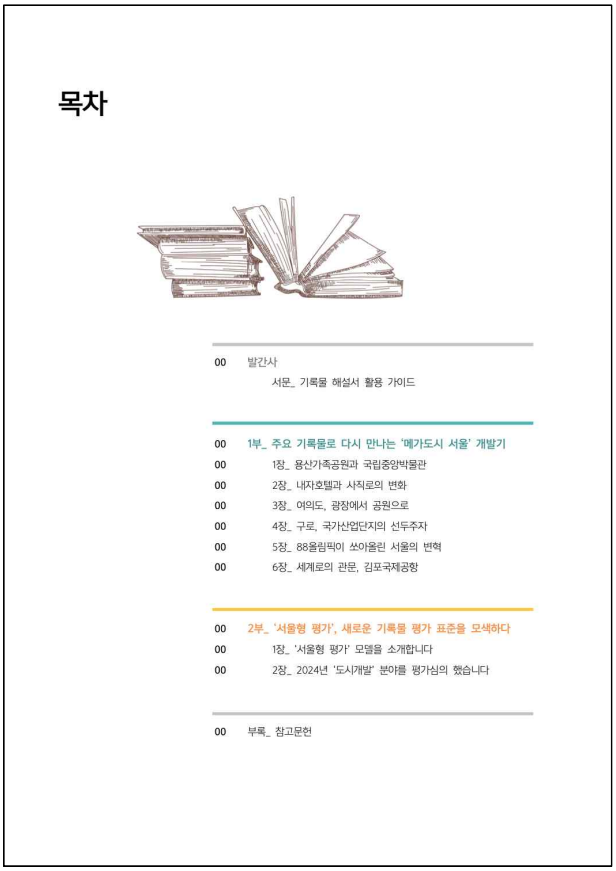
■ 콘텐츠 에디팅

- 필자별 원고 집필 및 보완(선정 기록물 공개 여부 재확인)
- 해설서 구성안에 따른 콘텐츠 에디팅

□ 디자인 (교정교열, 감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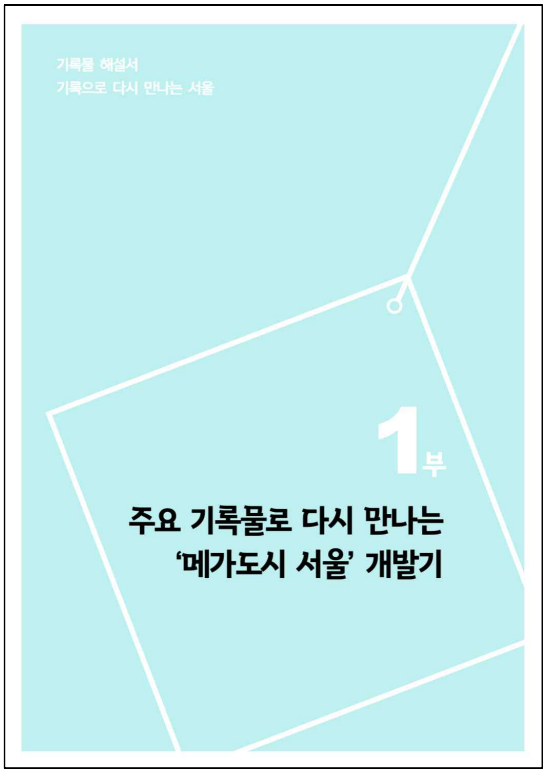
▪ 표지 및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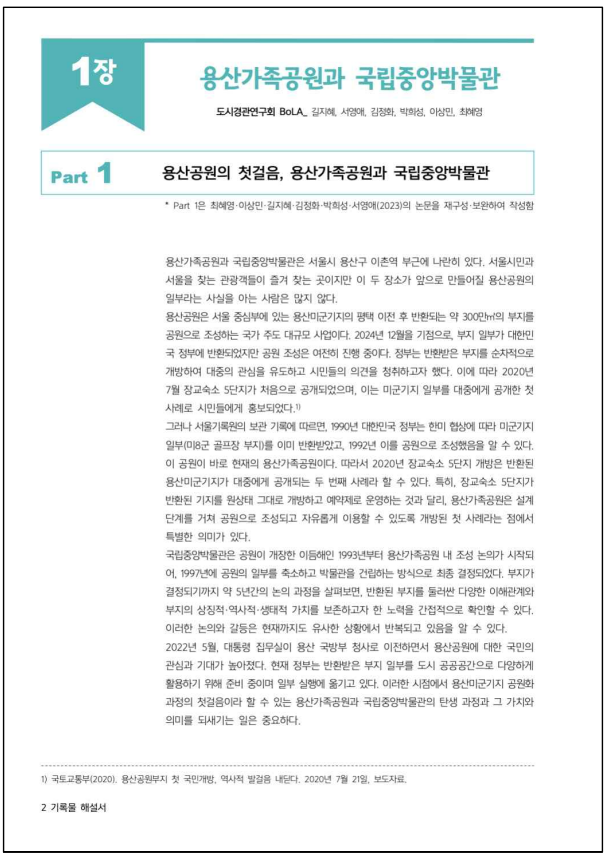




■ 본문 PART1

● 주제1_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성과 변화





1장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도시경관연구회 BoLA_ 김지혜, 서영애, 김정화, 박희성, 이상민, 최혜영

Part 1 용산공원의 첫걸음,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 Part 1은 최혜영·이상민·김지혜·김정화·박희성·서영애(2023)의 논문을 재구성·보완하여 작성함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역 부근에 나란히 있다.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이 두 장소가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공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용산공원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후 반환되는 약 300만㎡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국가 주도 대규모 사업이다.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부지 일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되었지만 공원 조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장교숙소 5단지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이는 미군기지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한 첫 사례로 시민들에게 홍보되었다.[1]

그러나 서울기록원의 보관 기록에 따르면,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협상에 따라 미군기지 일부(미8군 골프장 부지)를 이미 반환받았고, 1992년 이를 공원으로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원이 바로 현재의 용산가족공원이다. 따라서 2020년 장교숙소 5단지 개방은 반환된 용산미군기지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두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장교숙소 5단지가 반환된 기지를 원상태 그대로 개방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용산가족공원은 설계 단계를 거쳐 공원으로 조성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원이 개장한 이듬해인 1993년부터 용산가족공원 내 조성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에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고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부지가 결정되기까지 약 5년간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반환된 부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부지의 상징적·역사적·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갈등은 현재까지도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 정부는 반환받은 부지 일부를 도시 공공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일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과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탄생 과정과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

1) 국토교통부(2020). 용산공원부지 첫 국민개방, 역사적 발걸음 내딛다. 2020년 7월 21일, 보도자료.



중반 이후로 예상되었고, 약 300만㎡에 이르는 기지 전체를 단기간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여겨졌다. 대신 미8군 골프장 부지는 이미 반환이 결정되었고, 39.6만㎡에 달하는 골프장 부지를 빠르게 공원으로 조성해 대중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골프장 부지 조성에 대해 "짜깁기식이 아니라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뤄 건설할 것"[8]을 주문하며, 골프장 부지 공원화가 전체 공원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기지 전체 반환 후 조성될 대형 공원의 미래를 염두에 둔 큰 그림을 요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골프장 부지의 공원화 사업은 미군 반환부지 공원 조성이 시작된 상징적 사업이 되었다. 1989년 기본구상안은 전체 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구상안 내에 미8군 골프장 부지의 공원 계획도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원의 명칭으로 '용산시민공원'이 처음 등장하며,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구상한 점을 부각하였다(그림 1, 2 참조).

그림 1. 용산시민공원 조성계획 조감도(1989년)
식별번호 RG303489-SR303527-FI76806-IT1101562
건 제목 용산미8군이적지공원화계획 추진내용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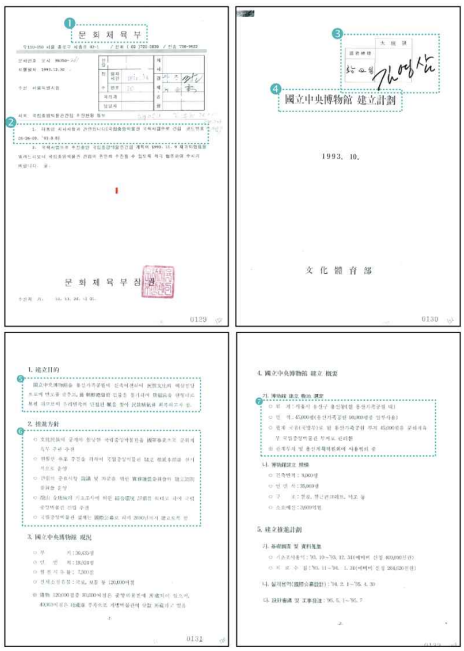
그림 2. 용산시민공원 조성계획(1990년)
식별번호 RG303489-SR303527-FI77113-IT1104976
건 제목 용산미8군골프장부지 매수계획

골프장에서 공원이 되기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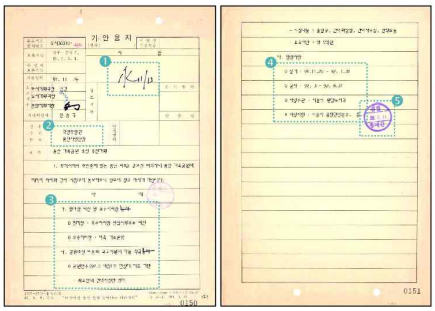
서울시는 공원 조성계획과 더불어 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1989년 4월 26일 발행된 「국방부 관재 22400-424호」에 따르면, 국방부는 1990년 미8군 골프장 부지를 반환받으면 서울시에 매각할 계획이므로, 이를 위해 서울시에 부지 매입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9]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군 측에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고 미군은 용산 미8군 골프장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10] 서울시는 1989년 대체 골프장 건설에

8) "용산미8군이적지공원화계획추진내용통보". 서울기록원 소장. (식별번호: RG303489-SR303527-FI76806-IT1101562)
9) "용산 미군 골프장 처분계획 송부". 서울기록원 소장. (식별번호: RG303489-SR303527-FI77113-IT1104973)

<용산가족공원 조성 추진계획>



<용산가족공원 조성 추진계획>



식별번호 RG135-SR156-F15648-IT22202
철 제목 용산군이적지내사설물
건 제목 용산가족공원조성추진계획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1991년 11월 14일 생산한 공문으로,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전달되었다.

❶ 서울시 제24대 이해원 시장의 서명이다. 이해원 시장은 1991년 2월 19일~1992년 6월 25일 동안 재임하였다.

❷ 국방부 용산사업단은 주한미군사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 6월 1일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미군과 용산가족공원 조성 추진계획 협의를 담당한 용산사업단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❸ 1991년 11월 7일 '용산가족공원 조성추진' 공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헬기장 이전 및 오수처리장, 공원조성 비용의 국고지원 등의 서울시 결정사항을 국방부 용산사업단과 공유하였다. 헬기장은 오수처리장 인근으로 이전하고, 오수처리장은 미군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공원 착공과 관련해서는 출입구, 간이화장실, 간이사무실, 산책로 등의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설치하고 간소화된 형태로 개방하기로 했다.

■ 본문 PART1

● 주제2_ 계획도시 여의도의 광장과 공원

3장 여의도 광장과 공원

한승지

Part 1 여의도와 여의도광장

여의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서울 개발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의 경관을 잘 보여 준다. 여의도는 서울 개발 과정의 요충지로 꼽히는 영등지구와 함께 한강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두 도심은 한강 개발의 역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여의도의 신시가지화와 동시에 건설된 여의도광장(당시 5·16광장, 현 여의도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스팔트 광장으로, 무려 12만 평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며 국가적 행사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54]

여의도, 철저한 계획으로 개발된 도시

1960년대의 서울은 국가의 성장 전략이었던 조국 근대화에 부응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거쳤다.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돌격 건설'이라는 시정 구호를 내세운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으며, 박정희 정권의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공간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도시 개발이란 곧 생산력 향상을 위한 재반환경 구축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 개발 사업은 바로 한강 개발 사업이다. 한강 개발 사업은 제1차(1967),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1981)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의도는 김현옥 시장에 의해 시작된 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신시가지로 거듭났다.

여의도는 일제의 간이 비행장(1916)으로, 광복 전후에는 전시 비행장(1945)으로, 이후에는 한국 최초의 공군 기지로 사용되다가 1957년 김포공항이 건설되며 비행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었다. 여의도는 모래섬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고,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되는 치명적인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래 '넓은 섬'을 의미하는 여의도는 '나나 가져라'라는 뜻을 담아 '너의 섬'로 이해되기도 했는데, 김현옥 시장은 한강 개발과 동시에 버려진 땅이었던 여의도를 개발 가능한 택지(주거 가능한 토지)로 전환하고자 했다.

날로 격증하는 인구문제와 인구과밀화에 따른 제반장애요소가 심각화함에 감(勘)하여 도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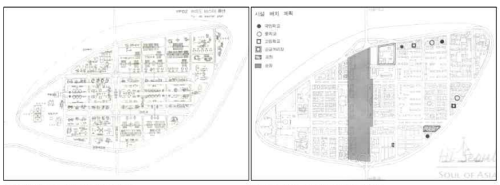
54) 서울 안에 광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남산공원, 서울운동장, 장충단공원 등지에서 각종 행사가 개최되곤 했는데, 공간적 제약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기는 어려웠다.

가고처럼 여의도를 활용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민광장, 중심업무지구,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외교기관(외국공관공지)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인공 도시로서 여의도를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당시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울 만큼 현실성이 부족했고,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사고로 김현옥 서울시장이 경질되면서 기각되었다.

광장의 탄생

서울시는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광장 조성 계획을 세웠다. 최초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여의도 개발 계획 내 광장 계획안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도서관, 과학관, 체육관, 음악당 등이 들어선 '민족의 광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67.12.26.; 장세훈, 2016). 이후 해당 계획은 한 차례 수정되었는데, 이때는 보행로와 국회, 시청,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각각 국민광장, 시청광장, 그리고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김현옥의 경질 이후, 새롭게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양택식의 3차 계획안은 이전 계획안과는 매우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택식 임명 이후 대통령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안과 3차 계획안을 견주었을 때 발견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여의도 중심에 5·16광장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광장 계획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작용했는데, 1970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양택식 시장에게 여의도 중앙부에 대규모의 콘크리트 광장을 조성하여 '5·16광장'이라 명명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손정목,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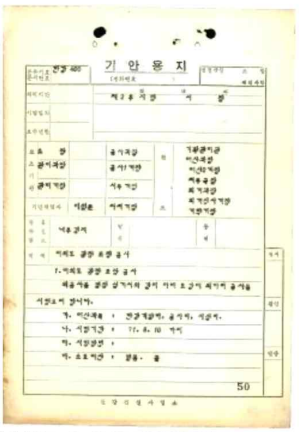


제1차 여의도 마스터플랜(1968년)
출처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1969). <여의도 및 한강연안개발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 15쪽에서 인용.

제3차 여의도 마스터플랜(1971년)
출처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1971).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 69쪽에서 인용.

박정희의 지시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설치가 계획된 대광장은 여의도의 동서를 가르게 되었다. 1971년에 완성된 <여의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2만 평 규모의 초대형 아스팔트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7억 60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여되었고, 5·16광장은 1971년 2월 20일 착공하여 착공 7개월 만인 9월 29일 완공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20; 장세훈, 2016).

Part 2 기록물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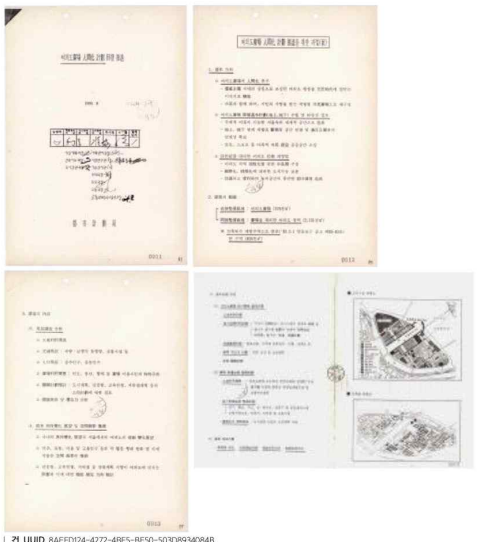


기 안 용 지

건 UUID 721662E6-AF0B-4EE5-B82E-EACC38BFBE73
철 제목 참고철(사고처리)
건 제목 여의도광장포장공사

- 본 문서는 1971년 서울특별시 건설국 하수과 한강건설사업소에서 생산한 공사대장 – 여의도광장포장공사설계서 기록 건의 첫 장에 해당한다.
- 여의도 개발은 한강 개발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맨 위의 '분류기호문서 번호'인데, '한강 400'은 이 문서가 한강 개발 관련 건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 준다.
- '가.'의 예산과목을 보면 한강개발비, 공사비, 시설비가 적혀 있다. 이는 한강개발을 명목으로 진행된 여의도 신시가지화 사업이 '한강개발비'라는 예산과목으로 특정되었음을 보여 주며, 공사비와 시설비는 광장 조성에 필요했던 재료 비용, 수목 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면 '자전거 타기', '하이킹',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타기에 좋은 곳으로 여의도광장을 다루는 기사 자료가 속속들이 발견된다. 동아일보에서 주최했던 동아 사이클 대회의 출발지는 매년 여의도광장이었으며, 매년 봄마다 여의도광장은 '상춘인파가 모여 자전거를 타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보도되었다. 1984년 당시 롤러스케이트 대여료가 500원이었다는 기사 자료,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조선일보, 1984.4.1.).



건 UUID 8AEFD124-4272-4BF5-BE50-503D8934084B
철 제목 여의도광장개선계획
건 제목 여의도광장안간화계획용역추진

기업해 2년 동안 새벽 사이클링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본문 PART1

● 주제3_ 88서울올림픽과 대규모 도시 개발

5장

88올림픽이 쏘아올린 서울의 변혁

신명진(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Part 1 88서울올림픽이라는 사건

올림픽, 도시브랜딩, 도시개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게임, 엑스포. 국내외 여러 유원과 논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각 도시 행정부는 유치 전략을 짜고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촘촘한 이동, 유통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은 국가를 넘어서는 특정 도시의 매력도를 중요한 척도로 삼았고, 이에 따라 오늘날 도시는 국가에 속한 행정 구역이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초국가적, 초국경적 브랜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 속에서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쇠퇴, 전쟁과 같은 참사를 겪은 도시가 극적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세계 곳곳의 도시가 '탈바꿈'을 위해 올림픽을 유치했고, 이를 계기로 도시의 인프라와 사회구조를 극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대적 미래도시'로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시의 올림픽대회 유치와 강남개발에 대해 연구한 김백영은 이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과 같은 비서양 지역에서의 메가이벤트는 서구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했기에 대규모 도시개발과 도시경관 정비 사업이 수반되었다"고 설명한다.[63] 예를 들어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전후 일본의 패전국 이미지를 벗기 위해 폐허였던 도시의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개발했고, 이 밖에도 경기 시설이 몰려있었던 고마자와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으로 이용되었던 요요기 공원이 도심에 들어서며 미래형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실제 올림픽 유치 이후 일본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세계의 경제에 닻을 내렸다는 점은 선진국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많은 국가와 도시에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나아가 1988년 서울올림픽 다음으로 치러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건축 분야의 협업을 통해 바로크 시대의 건축적 화려함을 현대 도시건축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했고, 이후로도 2016년 리오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등이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선진 도시로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고 도시 개발과 접목해 도시의 극적인 변화를 이끈 사례로 가장 손꼽히는 사례는 단연코 1988년 서울올림픽, 즉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일 것이다. 1970~80년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63) 김백영 (2017) 강남 개발과 올림픽 효과.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7: 69쪽.

올림픽조각공원과 선수촌, 기자촌



올림픽 선수촌 설계작품시상식, 1985-06-21
식별번호 RG5-SR102-IT3871
소장처 서울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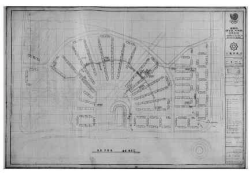


올림픽 선수촌 모형 주택, 1987-02-16
식별번호 RG5-SR102-IT3869
소장처 서울기록원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게임보다 더 큰 규모의 국제 행사인 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해 5000여 세대 규모의 올림픽 선수촌과 기자촌, 훼밀리타운, 올림픽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 시설 건립과 한강 등 도시 정비가 한국전쟁 이후 압축고도성장을 통해 변화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면, 올림픽공원 일대의 대규모 주거시설 건설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 시설과 공원의 마스터플랜은 환경계획연구소가 맡았고, 선수촌 아파트 단지의 경우 1985년 "'88서울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국제현상설계"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현상공모를 진행해 황일인과 우규승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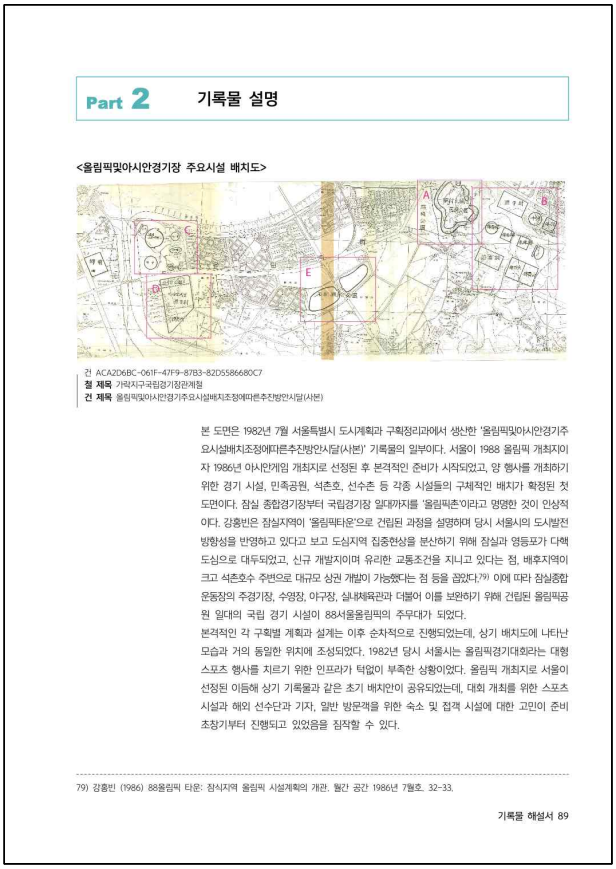


올림픽 문화센터 및 선수촌, 1988-8-22.
식별번호 RG5-SR102-IT3649
출처 서울기록원



옥외전화 및 설비 배치도(올림픽선수촌·기자촌 신축공사, 1986)
식별번호 RG21655-RG21657-FI53353-IT678955
출처 서울기록원

당선안은 올림픽공원의 녹지 공간과 연계되는 중앙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진 선수촌과 외곽의 격자형 기자촌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올림픽대회 이후 '버림'받은 한국형



Part 2 기록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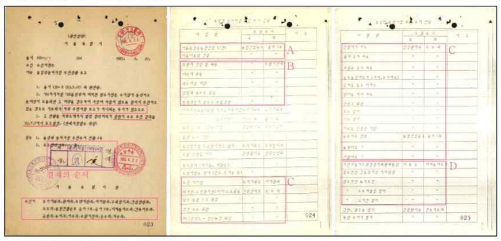
<올림픽및아시안경기장 주요시설 배치도>

건 ACA2D6BC-061F-47F9-87B3-82D5586680C7
철 제목 가락지구국립경기장관계철
건 제목 올림픽및아시안경기주요시설배치조정에따른추진방안시달(사본)

본 도면은 1982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구획정리과에서 생산한 '올림픽및아시안경기주요시설배치조정에따른추진방안시달(사본)' 기록물의 일부이다. 서울이 1988 올림픽 개최지이자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된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고, 양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 시설, 민족공원, 석촌호, 선수촌 등 각종 시설들의 구체적인 배치가 확정된 첫 도면이다. 잠실 종합경기장부터 국립경기장 일대까지를 '올림픽촌'이라고 명명한 것이 인상적이다. 강홍빈은 잠실지역이 '올림픽타운'으로 건립된 과정을 설명하며 당시 서울시의 도시발전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도심지역 집중현상을 분산하기 위해 잠실과 영등포가 다핵 도심으로 대두되었고, 신규 개발지이며 유리한 교통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 배후지역이 크고 석촌호수 주변으로 대규모 상권 개발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79] 이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립된 올림픽공원 일대의 국립 경기 시설이 88서울올림픽의 주무대가 되었다.
본격적인 각 구획별 계획과 설계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상기 배치도에 나타난 모습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다. 1982년 당시 서울시는 올림픽경기대회라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된 이듬해 상기 기록물과 같은 초기 배치안이 공유되었는데, 대회 개최를 위한 스포츠 시설과 해외 선수단과 기자, 일반 방문객을 위한 숙소 및 접객 시설에 대한 고민이 준비 초창기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9) 강홍빈 (1986) 88올림픽 타운: 잠실지역 올림픽 시설계획의 개관. 월간 공간 1986년 7월호. 32-33.

<올림픽 준비사업 추진 부서 현황>



건 C336A6C3-27C6-4C29-A206-2DB3F9617E29
철 제목 가락지구국립경기장관계(3-1)
건 제목 올림픽준비사업추진상황보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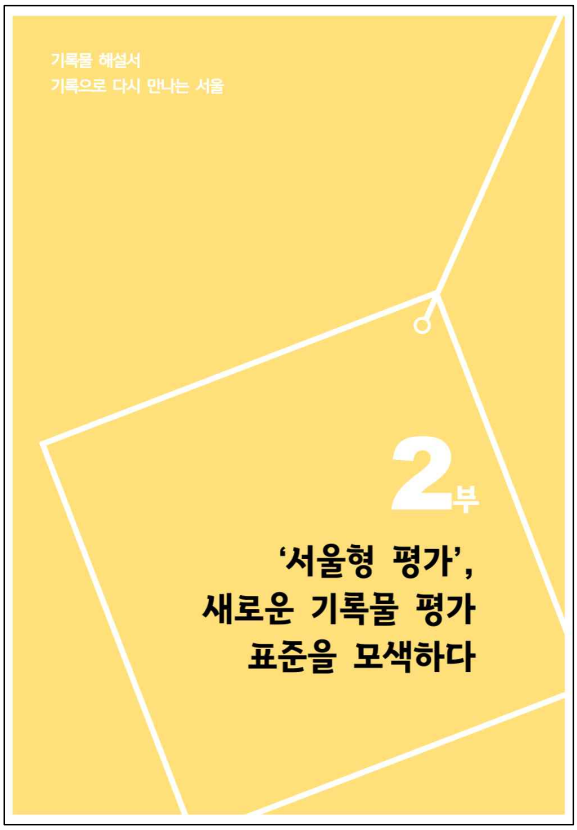
1984년 6월 서울특별시 시장이 각 수신처(도시계획과, 관제과, 주택개발과, 재개발과, 구획정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종합건설본수 공사 1부, 공사 5부, 세마을지도과, 건축지도과, 공원과, 녹지과, 치수과, 수원기전과, 급수과, 하수과)에 송달한 문서 '올림픽준비사업추진상황보고'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올림픽 준비사업의 목록을 보면 경기장 건립과 각종 선수촌 시설 등 행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물론, 교량과 차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사업, 보도와 녹지 조성 등의 도시미화 사업, 환경정비를 위한 각종 시민활동까지 전방위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이처럼 올림픽은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준비한 대형 기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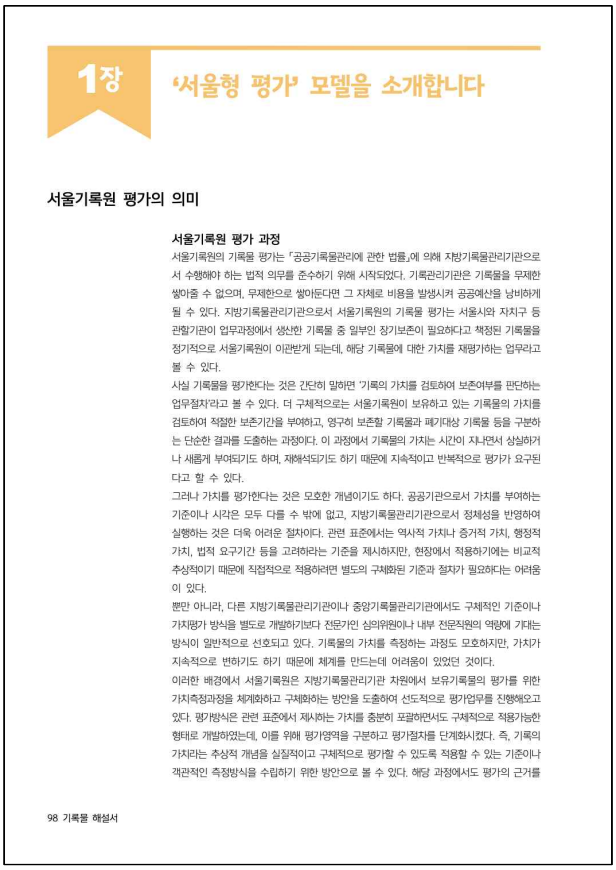
기안 표지

결재의 순서: 계(수신 담당자), 환지계장, 구획정리과장의 순서로 결재가 완료된 문서이다. 구획정리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81] 이후 해당 법령이 폐지 및 「도시계획법」 내 개발사업 부문과 합쳐지며 오늘날 '·「도시개발법」이 되었다.
시장실에서 시정의 여러 과로 전달했던 본 기록물은 경기 시설 설립 등 직접적인 올림픽대회 사업 외에도 서울시의 수많은 과가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불철주야 협력하고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 SLOOC을 비롯한 정부 부서가 전자를 중심으로 올림픽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의 경을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가 우선되어야 손님맞이 준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긴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23쪽의 기안 표지 하단에는

8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본문 PART2





1장 '서울형 평가' 모델을 소개합니다

서울기록원 평가의 의미

서울기록원 평가 과정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평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록관리기관은 기록물을 무제한 쌓아줄 수 없으며, 무제한으로 쌓아둔다면 그 자체로 비용을 발생시켜 공공예산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평가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관할기관이 업무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 일부인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책정된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서울기록원이 이관받게 되는데,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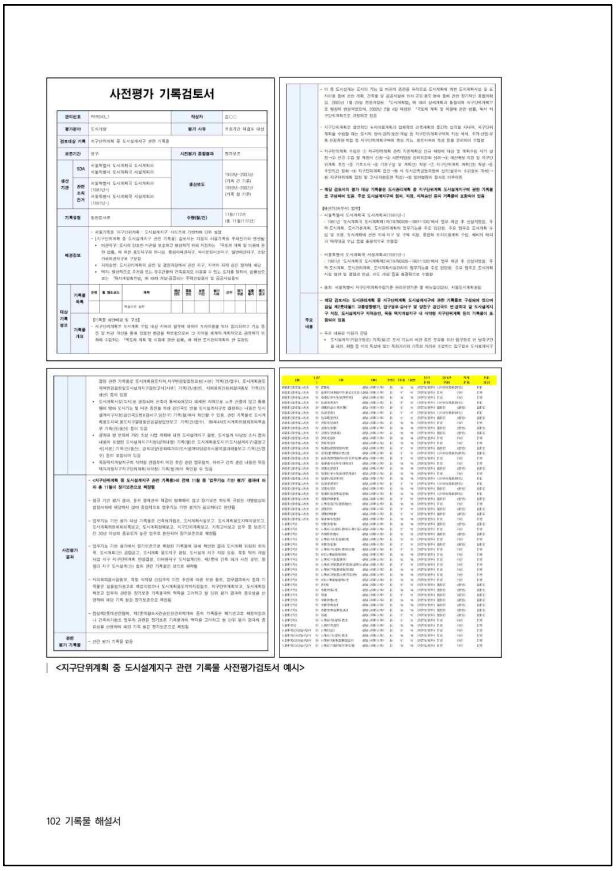
사실 기록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기록의 가치를 검토하여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절차'라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가치를 검토하여 적절한 보존기간을 부여하고, 영구히 보존할 기록물과 폐기대상 기록물 등을 구분하는 단순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의 가치는 시간이 자나면서 상실하거나 새롭게 부여되기도 하며, 재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나 시각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절차이다. 관련 표준에서는 역사적 가치나 증거적 가치, 행정적 가치, 법적 요구기간 등을 고려하라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비교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려면 별도의 구체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치평가 방식을 별도로 개발하기보다 전문가인 심의위원이나 내부 전문직원의 역량에 기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기록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도 모호하지만,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차원에서 보유기록물의 평가를 위한 가치측정과정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선도적으로 평가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평가방식은 관련 표준에서 제시하는 가치를 충분히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였는데, 이를 위해 평가영역을 구분하고 평가절차를 단계화시켰다. 즉, 기록의 가치라는 추상적 개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객관적인 측정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도 평가의 근거를

98 기록물 해설서



사전평가 기록검토서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설계지구 관련 기록물 사전평가검토서 예시>

102 기록물 해설서

□ 인쇄·제본

- 인쇄 감리 및 인쇄
- 후가공
- 제본

□ 최종 산출물 및 제출물

- <기록물 해설서> 출판물 300부, PDF 최종 파일

2024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 사업 결과 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4.11.

archives° seoul° go° 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윤정훈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우혜린 기록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전화 02-350-5600

편집 및 디자인 아카이브웍스(주)
인쇄

© 2024. 서울기록원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ISBN